

한홍구 교수 인터뷰

“박근혜는 유신의 상징적 기둥이었다”

▶ 3면

2012 대선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진보

▶ 4, 6면

커지는 노동자의 목소리
공무원, 학교비정규직,
전교조, 철도, 가스, 사회복지 ...

▶ 5, 11, 12, 14면

유럽 반긴축 투쟁
커지는 노동자 파업과
반나치 투쟁

▶ 8~9면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의
실종된 고리

▶ 5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미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경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6499-279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Left21.com

제91호 | 2012년 10월 22일 ~ 11월 4일 | 값 1,800원

국제주의 |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 노동자 연대

리프트21

꺼져라
1%



이겨라 99%



정리해고 금지

쌍용차노조 김정우 지부장



비정규직 철폐

현대차 비정규직 최병승 동지

NLL을 이용한 신북풍몰이 중단하라

관련 기사 2면

리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모두가 ‘유신 말춤’을 출 때까지 한 국 사회를 변화시키자.”

〈뉴데일리〉 칼럼니스트 조우석

“난 재벌 좌파. 한국을 확 뒤집어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박근혜가 영입한 김성주, 사고칠 사람 하나 늘었네

“약점이나 조금만 한계가 있으면 다 눈물 찔쩍 흘리고 도망가요. 아시죠? 잘못하면 남자 탓하고 도망가요. 그런 여자들 제가 어떻게 시켜요.”

김성주, 박근혜 혁신 인사의 실제

“애 쟈 먹이면서 주방에 앉아 ‘웰빙 진생쿠키(인삼과자)’를 만들었다’고 구글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차칭 재벌 좌파 김성주의 드립

“노인 노조는 노인들을 분열시키는 좌파 조직 책동이다. 북한에 가서 해라.”

어버이연합의 흥분

“[당직자] 너희들 왜 지각했어? 앞으로 나와! 남자들은 오늘부터 나와 찹질방에서 같이 자자!”

새누리당 김무성의 선대위 운영 방식

“사백 4시까지 일을 챙기다 야전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왔다. 이게 바로 애국심.”

김무성

“이런 주장들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상황을 보고 ‘당이 살아 있다’고 느꼈다.”

박근혜의 맘에도 없는 소리

“노조에서 또 뭐라고 지랄 나오는 것 같아 … 풍하고 언론하고는 피해야 해 … 지금 나는 완전히 병신 되지 않았어요 … 텔레비전에서도 나쁜 놈 소개할 때 꼭 나오거든.”

정수장학회 최필립의 뉘트리

“다음 노벨평화상은 여대 안 망하고 잘 버터준 댓가로 지구에게 주면 어떨까.”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수상에 조롱하는 한 네티즌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호는 11월 5일)

서울 강남역11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오후 7:00~8:00

인천 주안역 남광장 오후 6:40~7:4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오후 6:45~8:40

건국대(서울) 학생회관 앞 오전 11:45~12:45

고려대(인양) 정경대 후문 오후 1:00~2:00

한국외대(서울) 인문관 앞 오후 12:00~1:00

격주 화요일 (다음호는 11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오후 7:00~8:00

수원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앞 오후 7:00~8:00

부산대(부산) 정문 앞 오전 11:50~12:50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앞 오후 12:00~1: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오전 11:30~12:30

국민대(북악) 복지관 1층 오후 12:00~1:00

서점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질(성광관대앞), 이름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통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NLL은 제멋대로 그은 선이 맞다

우파 결집 색깔론 중단하라



사진 출처: 청와대

연평도를 방문한 이명박 이 자의 ‘땅따먹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을 남북 간 경계선으로 삼을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이 인정한 적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1996년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 이양호와 〈조선일보〉조차 동의한 사실이었다.

화약고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남한이 NLL 이 남 해상을 지금까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으므로 NLL이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북한도 1977년에 선포한 나름의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갖고 있다.

남한 지배자들이 그동안 NLL을 수호하겠다고 온갖 호전적 조처들을 하고 북한 지배자들도 맞대응을 하면서 이 지역은 언

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 버렸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고, 한반도 전체의 긴장도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NLL을 대선 쟁점으로 삼아, 호전적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시도는 매우 역겹다. 이런 시도는 최근 평통사 압수수색 등의 국가보안법 탄압과 국방부가 ‘종북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일들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응은 한심하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리 없다면서, 만약 그 발언이 사실이면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NLL을 확고히 지키며 필요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보수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계속되는 박근혜의 위기와 모순

박근혜의 위기와 좌충우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14일에 이북5도민 체육대회에 가서 “투철한 안보”를 약속한 박근혜는 다음날 마산을 방문해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발표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관해 “저와 관계가 없다.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뵈겼다가, 하루 만에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며 또 말을 바꿔야 했다.

한편, 박근혜가 부마항쟁과 유신체제 피해자에 대한 ‘위로’를 말하고 있을 때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 김무성은 “종북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고, 국가보훈처는 ‘유신 반대는 종북’이라는 교육자료를 일선 교육기관에 배포했다.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내걸고는 정자 반값등록금 시위를 주도한 한대련을 종북 마녀사냥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명박근혜’다.

이런 모순적 행보 속에서도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기반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최근 고문기술자 출신인 주재엽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는데, 친박 당대표 황우여는 그런 고문기술자들이 만든 조작 사건인 ‘학림 사건’의 판사였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인사들을 보면, 빛 중 둘이 재벌 출신이다. 그중 하나인 김성주는 “경제민주화를 강제로 하는 것은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

딜레마

헌법재판소장 출신 김용준은 현재소장 시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최근 확장성의 한계 속에서 내부 분열

위기까지 겪은 박근혜가 이런 인물들에 더해 뉴라이트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며 선대위를 재구성한 것은 박근혜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 준다.

박근혜는 “지지충 확장성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산토끼에게 당근을 흔들지만, 집토끼를 위해 더 많은 당근을 남겨놔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위기로 동요하는 집토끼를 달래고 단속하려면 산토끼에게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도 휘둘러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최근 새누리당은 NLL을 이용한 ‘종북’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결국 외연 확대가 한계에 부딪히며 위기를 겪은 박근혜는 당분간 우파 결집을 단단히 하면서도, 선거를 최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어 반우파 청년세대가 환멸과 냉소로 돌아서길 바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패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는 야당 후보

NLL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안보를 굳건히 해아 금강산 관광도 가능하다’는 안철수의 처신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태도로는 서해상 남북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북한에 NLL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어떻게 서해상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벌써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그가 당선 후에도 보수층의 압력에 휘둘리며 온갖 ‘배신’을 할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에 반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경선 후보는 옹계도 NLL이 해상경계선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며 문재인이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북한 대통령 후보’라는 우파의 비방을 받고 있다.

우파의 ‘안보’ 공세는 남북 관계에도 긴장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탈북자 단체가 임진각에서 뼈라를 살포하면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에 국방장관 김관진은 “도발 원점을 완전히 격멸하겠다”며 섬뜩한 말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땅따먹기’식 해상경계선 주장이나 호전적 군사 조처들이 아니다. 서해상의 군사 행위들을 모두 중단하는 등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우파의 시도를 모두 저지해야 한다.

김영익

들이 대중의 진정한 변화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NLL에 관한 우파의 호전적 ‘안보’ 프레임에 굴복한 문재인이나, 신자유주의 관료들을 영입하며 ‘성장’ 프레임에 타협한 안철수 모두 진보적 청년들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파는 ‘어차피 경제민주화 등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모두 비슷 비슷하다’거나 총선 때처럼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이라는 논리를 다시 꺼내고 있다.

진보진영이 독자적 진보 의제를 제시하며 반우파 정치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자신들의 요구를 부각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김문성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비정규직 없는 일터·사회

10만 촛불행진

10월 27일(토) 오후 5시 서울역 광장

주최 :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

주관 : 민주노총

대정부 임투 승리,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0월 31일(수) 오후 3시 여의도 문화마당

주최 :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호봉제 정제 일당협 승리

교육공무직법안 제정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11월 3일(토)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11월 3일(토)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 2013교육연대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문화제

11월 3일(토) 오후 4시 서울역 광장

(서울시청광장으로 행진)

생명평화대행진 ‘모두가 하늘이다’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



한홍구 교수에게 듣는 박근혜와 유신

“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를 거느리고 무슨 사과입니까?”

다양한 저서를 통해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훈을 배우는 데 큰 도움을 줬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사진)를 유신 40주년 당일(22일)에 만났다. 한홍구 교수에게서 박정희 독재와 그 계승자인 박근혜의 실체를 들었다.

한홍구 교수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수장학회 사건의 실제 등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이런 조사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쓴 《장물바구니: 정수장학회와 한국사회》(돌아온 산)도 곧 출간될 예정이다.

Q. 흔히 우파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5·16 쿠데타나 유신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평가합니다.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습니다.

5·16이 불가피했다면 육군 소장 박정희가 집권하려고 불가피했고, 유신은 3선까지 해 먹은 박정희가 더 집권하려고 불가피했던 거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경제 발전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유신 체제는 박정희가 민주 사회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죠. 박정희 본인이 민주 사회 부적응자예요.

반대하는 놈들은 반체제 반국가로 몰아서 배제하거나 감옥으로 보내거나 한 게 박정희 체제였고, 그런 동원을 하려고, 국민을 감시하려고 고유번호를 부여했고요, 그 번호에 모든 정보를 집적시켜서 개인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주민등록증 제도죠.

유신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중앙정보부, 보안서, 치안본부 대공본실 같은 공안기관이 말 안 듣는 자식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니까 유지되는 체제란 말이에요. 두들겨 패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체제.

그런데 우리 사회 민주화가 밀고 올라가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보다 함부로 잡아가다 간첩 사건을 못 만드는 거지. 고문도 거의 없어졌죠. 그 전에는 안심하고 고문을 했는데, 이제 고문을 하면 자기가 옷을 벗게 되니까. 개과천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닌 거야. 고문하는 자식들을 이제 국가가 더는 비호를 못 해주게 된 거예요.

Q. 박정희 체제의 폐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유신 시대에 지어진 집 속에 살고 있다.' 그 집을 다시 지은 것도, 리모델링 한 것도 아니고, 도배 정도만. 도배도 그나마 하다 말았죠.

결과를 갖고 모든 출발과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 '하면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 '총화단결'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의 비판도 허락하지 않는 것. 민주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 갈등을 조정하고 그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을 비효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등.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일본 군국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새끼 천황이라고 할까요? 박정희는 천황을 꿈꿨고, 그러다 보니 새끼 천황을 무지 많이 낳았어요. 사람들이 유신 체제가 1979년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신 이후에 13년간 군사독재가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신 시대 박정희 경호원들이예요. 전두환이나 노태우 둘 다 경호실 작전차장보 지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도 박정희의 근위병들이 '박



‘걸어다니는 한국 현대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이어간 것이죠. 지금도 박근혜가 국회의원 사상 검증하자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잖아요. 사실 유신 체제가 그러다 망했거든요. 부마항쟁이 일어난 한 계기가 김영삼 국회 제명 아닙니까. 그때 김영삼 제명하는 과정이 사상 검증이었던 거예요.

Q. 박근혜는 과거는 털어 버리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박근혜의 경우에 박정희 딸에다가 유신 시대 공주마마쥬. '유신공주'라는 별명이 그냥 어린 공주가 아니고 왕비 없는 공주였던 말이에요. 유신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기둥이었던 말이에요.

[문제는]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시대엔 그랬지만 돌이켜 보면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준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옹호하고 정당화하잖아요. 이걸 [딸이니까 박정희 잘못에 책임져라 하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우릴 과거로 끌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고 본인이 유신 시대에 중요한 구실을 했기 때문에 뺏속까지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우리가 다시



금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정사는 동일인에 의해서 헌법이 두 번이나 유린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나와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옹호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기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혹은 본인이 집권해 보니까 좋더라 말야. 더 하고 싶어졌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헌법을 유린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Q. 최근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의 관계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사람을 석 달 동안 가둬 놓고 하는 게 강압이고 강탈이라는 것이고, 강탈된 재산이라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걸로 부모 이름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 정수장학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국가 차원의 장학회 사업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박정희, 육영수 돈은 한 닢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그냥 개인적인, 박정희 우상 사업이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문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죠.

예컨대 5·16 장학회를 만든 게 김지태의 개인적 재산을 탐낸 게 아니잖아요. 언론사를 뺐고, 그게 박정희의 언론장악인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 유체이탈(維體離脫)

“유신체제에서 탈출하자”라는 뜻을 가진 이 전시회는 한홍구 교수와 뜻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기획한 '유신 40년 공동 주제기획 6부작' 전시 기획 프로그램이다.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평화박물관에서 6부작 중 2부 “구국의 영단” 전시전이 열리고 있다.

MBC 파업, 부산일보 파업 같은 게 일어나는 게 정수장학회 문제 아닙니까.

강탈 재산에 기대서 집권을 하겠다. 그걸 또 팔아서 선거에다 써 먹겠다 하는 거죠. 1971년도 선거를 보면, MBC 팔아서 박정희가 선거 치렀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분이 30퍼센트만 남은 거죠. 국회에서 그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습니다. 그 의혹을 제기한 이종남 의원은 유신 선포하고 난 다음에 헌병대에 끌려가서는 죽도록 고문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MBC 팔아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부전여전'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정수장학회 인맥 문제도 있어요. 김기춘 같은 사람은 장학회 1기 출신이에요. 나중에 검사 돼서 유신헌법 만든 실무자예요. 강기훈 유서 대필 때 법무부장관이었고, 지금 7인회에 있고.

국가적인 장학사업이라면 가난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은 유신의 앞잡이들을 키워낸. 그걸 지금도 박정희 우상화하는 일들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때 나쁜 짓 했던 놈들이 다 박근혜 캠프에 가 있잖아. 그러니까 클린검증 소위원장이니 뭐니 떠드는, 남기춘이니 이런 것들, 그때 다 지휘 선상에 있던 놈들이예요. 그런데 그게 민중을 물어뜯은 사냥개 아닙니까. 박근혜가 과거사 사과를 했는데, 그때 물어뜯은 사냥개들을 옆에 애완견처럼 거느리고 하는 사과가 무슨 놈의 사과야. 그러면서 그 놈이 '정수장학회 옛날 같으면 총칼로 빼앗아 오는데' 그따위 소리 지껄이고 있는 게 무슨 과거사 사과냐고요.

Q. 박근혜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는 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이 우리 역사에서 정말 처음이었던 건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이 이만큼도 없는 자가 집권을 한 거예요. 그걸 박근혜를 낳게 하는 또 다른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대한 향수를 날았던 겁니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가면 정권 교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난 박근혜가 잡으면 복지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도, 재벌개혁도.

대신 박근혜는 박근혜대로 할 겁니다.

방향이 틀리죠. 뭐냐면 박정희 시대를 기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때는 서열이 확실했잖아요. 대통령 밑에 한참 아래 재벌이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하는 얘기가 '권력은 시장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복지도 시혜로서의 복지죠.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가령 1970년대 버스 차장들 있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열여섯, 열일곱부터. 애들 등하교 시간을 보면 사람이 많으니까 차장이 문도 못 닫고 사람들 손으로 틀어 막고 출발해요. 그게 겨울이라고 해 봐요. 버스 사장놈들이 저임금에 파카도 안 입혔다고.

그런데 '가카'는 그걸 그냥 가만 보고 계산 분이 아니거든(웃음). 그래서 방한복을 하나씩 사 줬어요. 그리고는 '박정희 각하께서 친히 고른 디자인이다' 이러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내고.

[그러니] 시혜적 복지라는 것도 과거 회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권리로서의 복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골라 주신 파카 입고 싶나 아니면 [충분히 월급 받고] 백화점 가서 내 맘에 드는 파카 사 입고 싶냐. 그 차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게.

복지 문제에서 노동이 빠진 복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거는 노동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고 노동자가 권리를 갖고 임금 제대로 받고 [하는 거죠.]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이 법적으로 강제가 되면 비정규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동 문제가 빠진 경제민주화는 사기라고 하는 거죠.

과거사 문제는 골치 아프죠. 피해 갈 수 없고. 그렇지만 박근혜의 발목을 잡는 문제지 박근혜를 쓰러뜨릴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로 결정타를 날리려면, 미래에 대한, 민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에게 직접 와닿는 문제들을 갖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정하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는 선거예요. 우리 세대한테는 노후가 달린 거고, 지금 20대들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달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고 나서야 해요.

인터뷰 김문성 / 정리 김지윤·이현주

폴라주 84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법으로도 안되는 정몽구의 정신상태

판사: 송전탑에 오른 사람 니네 회사 직원아니야?
몽구: 우리 회사 직원 아니므니다.
판사: 먼소리야! 이미 판결 내렸잖아!
그럼 저 사람들은 누구야? 스파이더맨이야?
몽구: 스파이더맨 아니므니다.
판사: 그럼 뭐하는 사람들인데?
몽구: 사람이 아니므니다~



illusion

문재인·민주당과 포용정책2.0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이명박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남북 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도적 지원조차 중단하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고집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선제 타격’ 같은 얘기가 서슴지 않고 튀어 나왔고, 북한도 이명박을 가리켜 “역적”, “괴뢰 도당”이라며 반발했다.

남북 간의 긴장은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다. 금강산 피격 사건에 이어 서해 교전이 터지고, 2010년 연평도에서 처음으로 남북이 상호 포격을 하는 사태까지 터졌다.

지금도 남북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명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 삼아 은근슬쩍 미국의 MD 체제에 참가하려 하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 미사일 사거리를 최대 8백 킬로미터까지 연장했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을 몰래 추진하는 등 한미일 군사동맹을 발전시키려 했다.

당연히 이런 짓들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처럼 남북 관계가 너무 엉망진창이니, 대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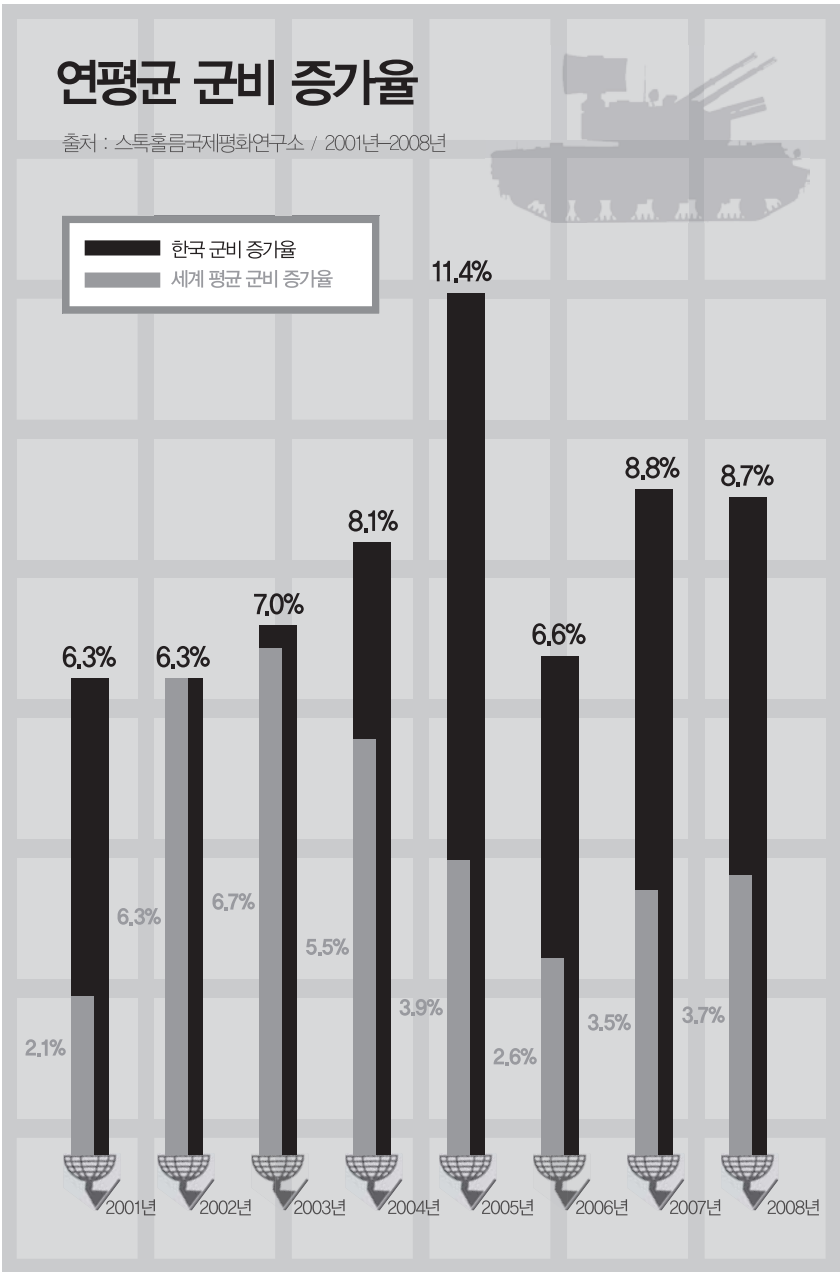
특히 이종석, 임동원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중심이 돼, 다시 대북 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포용정책1.0’의 성과가 훼손됐고 한반도 주변 환경도 변했으니, 이제 포용정책2.0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포용정책2.0은 백낙청 교수가 주도하는 이른바 ‘2013년 체제론’의 핵심이며, 문재인이 대북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포용정책2.0의 골자는 기존의 포용정책에 더해, 남북연합의 건설, 남북 협력에 대한 시민 참여의 획기적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평화-경제-복지의 선순환 시대의 실현”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 국내 민주주의와 경제·복지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겠다며, 이 문제들을 총체적인 국가 전략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포용정책2.0은 “연립정부 내지 민주진보진영 연합의 근거”이기도 하다.

이명박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에 비해, 남북이 교류·협력하면서 화해하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 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군비 증강 수준은 세계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이것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줬다.

대결보다는 화해가 상대적으로 남북 노동자 계급에게도 더 도움이 된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단지 평화·화해의 구상만을 담고 있지 않다. 포용정책은 남한 국가가 북한 국가에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고, 남북 관계를 남한 주도로 이끌어려 구상에서 비롯됐다. ‘포용정책의 전도사’라는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1999년 1차 서해 교전에서 남한이 승리한 것을 두고 ‘햇볕정책이 결코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자의 정책’임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강자의 정책

남한의 국력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이 시장 자본주의적 개혁·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포용정책에서 강력한 군사력은 기본 전제다. 실제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

은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지금도 문재인은 남한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지지한다. 이것이 북한에 가할 위협과 그에 따른 반발은 엄청난데 말이다.

북한 개혁·개방의 목적도 평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한 민중에게 통일은 2천5백만 명의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남한 자본가들에게는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 2천5백만 명을 새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북한 동포들한테는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땅값이 싼 북한 지역에 공장들을 지어서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면 남북이 서로 윈윈 하는 거다” 하고 주장한다.

게다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 협력이 가장 활발할 때조차 서해

교전 등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핵심에는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이 있는데, 남북 경협의 발전과 포용정책은 그를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론, 포용정책은 냉전 해체 후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세현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경제 강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분단상태로는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희생당할 수가 있다”고 염려했다.

그래서 남한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국력을 강화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 몫’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자주외교론, 자주국방론, 한반도경제론 등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전히 세계 최강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동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도 세계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친미적 자주’라는 모순된 주장을 내놓았다.

그래서 민주당은 집권 기간에 언제나 실천에서는 한미동맹을 넘지 않았고 북핵 문제 등에서 대체로 미국과 보조를 맞췄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팽배기지 확장에 동의하고 전략적 유연성도 합의해 줬다. MD 참가의 물꼬를 트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한 것도 바로 노무현 정부 때였다. 이런 조치들이 모두 한반도 평화에 큰 위협이 됐다.

지금도 이동석·임동원 등이 속한 한반도평화포럼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한미동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협력하고 대중·대북 압박에 동조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한다는 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오늘날 한반도 평화는 중미 갈등, 동아시아 군비 경쟁 등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문제들과 깊이 연관돼 있다. 따라서 문재인과 민주당처럼, 격화하는 제국주의 경쟁에 맞서기는커녕 줄타기를 하면서 군비 증강을 통해 긴장 고조에 일조하는 방식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지난 포용정책의 경험은 우리에게 남북 화해가 자동적으로 국내 민주주의와 진보적 개혁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줬다. 물론 남북 화해 무드가

국내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 더 좋은 조건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한 민중의 투쟁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그 점에서 포용정책의 주창자들이 계급투쟁을 남북 관계 진전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계급 연합의 고리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한국에서 남북화해협력 노선은 포퓰리즘적(다계급적) 기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포용정책에 대한 기대를 이용해 국내에서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려 했다.

이들은 민족 화해가 우선이라면서,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변했다. 그리고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을 잔인하게 짓밟았고, 노동자 투쟁은 남북 화해 무드를 해치는 짓으로 비난받았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과 민주노총의 일부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에 휘둘려 투쟁을 자제하곤 했다.

지금도 포용 정책2.0에 기반한 2013년 체제론은 계급 연합의 고리로 내세워지고 있다. 포용정책2.0에서 강조하는 “남북 정당 참여 확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등은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진보진영 일부도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근거로 연립정부 수립을 추구한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계급을 뛰어넘은 민족적 단결을 가장 중시한 나머지, 계급투쟁을 여기에 종속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불법 파견과 노동자 탄압을 일삼는 현대차 정몽구 같은 자와, 정당한 권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까지 해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화해할 수 있겠는가. 계급투쟁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진보의 동력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포용정책2.0과 지배계급 일부에 의존해서는 한반도 평화도 실현할 수 없다. 갈수록 첨예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그 자체에 맞서려는 생각이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친제국주의 지배자들에 맞서는 동아시아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계급적 단결을 통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진보의 독자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김영익

안철수 - 99퍼센트보다는 1퍼센트 소속?

출마 선언 때부터 ‘정치혁신’을 화두로 내세워 온 안철수가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우파와 새누리당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혜훈은 “무소속 대통령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며 “무소속 대통령은 이상(理想)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라고 안철수를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무시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재앙을 안겨 준 것은 새누리당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다. 새누리당 같은 보수세력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독재를 옹호하고, 대중의 삶을 파괴하고, 재벌·부유층의 편만 들어 왔다.

조종동이 “여론만 따라가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다”며 안철수를 비난하는 것

은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체제”에 대한 기층 여론의 반감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이 ‘정당 기반이 있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며 안철수를 비판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2004년 탄핵 역풍 속에서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을 얻었지만, 이라크 파병,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등을 추진하며 노동자·민중을 배신한 바 있다. 대통령과 의회 과반을 가지고도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소수 기득권 세력의 뜻에 따른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행태는 이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국회나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재벌, 국가관료 등에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재벌, 국가관료 등과 타협하려 한다면 개혁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국회에 큰 세력이 없더라도 진보적인 대중 운동에 기반을 두고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운다면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적

그러나 출마 후 안철수의 행보는 그가 기층 대중의 변화 열망을 대변하고, 이런 힘에 기반해 진정한 권력자들과 맞서며 개혁을 이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안철수는 “무소속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양쪽[여당과 야당]을 설득해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보수적 정부 관료들이나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원활하게 타협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안철수는 ‘낡은’ 관료 출신인 이현재·윤영관을 ‘멘토’로 영입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안정성’을 보여 준다며 전직 장·차관과 군 장성, 경영진 등으로 국정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게다가 그의 복지·경제 공약이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보수적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문재인은 내년부터 당장 국·공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비해, 안철수는 임기 말에나 반값등록금을 달성할 수 있다며 민주당 수준의 개혁에도 거리를 뒀다.

5년 동안 안랩의 매출 총액 중 고작 0.02퍼센트만을 사회공헌 기부금에 썼고, 5개월 만에 주가가 8백 퍼센트 폭등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거둔 바 있는 안철수가 내세운 ‘혁신경제’도 별로 신뢰를 못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안철수가 ‘개혁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정치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가 결국 민주당에 입당하든 무소속으로 대통령이 돼 여야를 존중하며 설득하려고 하든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

강동훈



우석균 칼럼

복지국가, 무엇이 실종됐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건강과 대안 부대표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 유세전이 한창이다. 이번에도 4년 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은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 3천1백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2009년에 법안은 통과됐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한 까닭은 공화당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은 ‘국가가 브로콜리를 강제로 구입’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서 위헌을 주장했고, 올해 6월에서야 미 대법원에서 겨우 5 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4년부터 시행될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공화당의 롬니가 당선하는 즉시 의료개혁을 무효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실 미국 의료개혁의 성사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오바마의 의료개혁이 진짜 의료개혁인지가 문제다. 오바마 ‘의료개혁’의 내용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당연한, 공적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도입과 의무가입이 아니다. 오히려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을 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미 공화당이 ‘브로콜리 강제구매’에 비교하며 왜 국가가 민영보험상품을 구매하게 하냐고 따지를 걸 만도 하다. 게다가 이 안은 애초 오바마가 내건 공약과도 다르다. 오바마의 공약은 국민들이 민영의료보험과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건강보험 중 하나를 선택(퍼블릭 옵션)하도록

해 민영보험기업의 이윤 추구를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고 있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오바마는 “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못 하는가?” 하고 물으며 “국민들도 공적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기롭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공적보험 선택 정책은 거대 보험회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후퇴하고 말았다.

오바마 집권 초기로 돌아가 보자. 2009년 12월 24일 상원에서 의료개혁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오바마는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시도가 실패한 이래 1세기에 걸친 싸움을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후진적

의사당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로버트 버드 민주당 최고령 상원의원은 “이 표는 내 친구 테드 케네디(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후 ‘예스’라고 외쳤다. 미국에서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 장면은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 주는 순간이었을 뿐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물론이고 존. F. 케네디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은 오바마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는 전혀 다른 공적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이었다. 당시 여기에 대해해 내놓은 리처드 닉슨의 공약이 바로 공·사보험의 선택, 즉 민영의료보험 혹은 정부 운영 의료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이었다.

다시 말해 오바마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후퇴한 공약이 바로 미국인들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닉슨의 정책이었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오바마의 ‘역사적인’ 의료개혁은 1960년대 공화당 정책보다도 못한 ‘의료개혁’일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오바마는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운동(PNHP)의 대표들을 아예 의료개혁 논의 테이블에 초청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을 경쟁시키자는 안 — 퍼블릭 옵션 — 을 포기하면서도 이를 핵심적으로 여기는 민주당 내 ‘진보파’에게 공개적으로 맹공을 퍼붓기까지 했다.

미국의 대중이 보수적이 된 것일까? 오바마가 공적보험안을 포기한 후 여론조사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안에 대한 찬반이 뒤집어져 반대표가 더 많아졌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답은 1960년대와 현재의 미국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존재와 조직화 수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60년대 미국은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대중운동이 매우 활발했던 시기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그나마 현재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빈민층 의료보호)가 도입됐다. 이후 미국 사회운동은 내리막 길을 걸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사회보장정책도 같이 내리막 길을 걸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는, 설사 어떤 복지제도도 보수정당에 의해 도입된다 하더라도 진보적 대중운동이 그 동력

이었음을 보여 준다. 비스마르크 시대가 대표적 예다. 흔히 비스마르크를 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 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싶어 도입한 것이 아니다.

동력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의 파도 속에서 ‘언론과 다수결이 아니라 무기(철)와 탄압(피)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이른바 ‘철혈’ 총리 비스마르크는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다. 그가 사회주의자 탄압법(1878)을 입법하면서 동시에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해 도입한 것이 건강보험제도(1881)와 연금제도(1891) 등의 복지제도다.

비스마르크 자신도 1884년 11월 독일제국의회 연설에서 “만일 사회민주당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사회개혁에서 행했던 적절한 진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독일 최초의 복지제도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세력은 유럽의 혁명, 그리고 계급투쟁을 강력하게 추동했던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과 급진적 노동운동이었다. 이후 복지제도의 역사 또한 고세훈 교수가 말하듯이 1백여 년에 걸친 치열한 “계급투쟁의 역사”다.

오늘날 어떤 복지국가 논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복지국가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핵심 쟁점이 아니라 하위 쟁점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한다.

예를 들어 김윤태 교수는 “민주당이 무상복지 운운한 것부터 잘못됐다. 복

지가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공짜인가. 복지국가에는 돈이 들고, 시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하고, 이상이 교수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걷어도 국가 차원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다. … 더욱이 이런 방법은 부유층을 사회적으로 경원시키고 공격하는 것이어서 사회통합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복지국가 담론 짚짜 실종사건’, 2012년 10월 9일자 <시사인>). 보편증세 담론이 실종돼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가 복지담론의 실종 혹은 보편증세 담론의 실종인가? 내가 보기에 복지담론이 실종됐다는 것도 과도한 주장으로 보인다. 박근혜까지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은 오히려 현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의 반증일 뿐이다.

지금 실종된 것은 누구나 돈을 내자는 보편증세 담론이 아니라, 왜 부자들과 기업들만 배부르고 서민들은 더 못살게 뻤는가를 똑바로 묻고 바로 부자들과 기업주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정직하게 주장할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아닐까?

실종된 것은, 복지국가가 부자와 빈자가 ‘공동구매’를 하자고 사이좋게 합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지배자들과 자본가에 대항해 누구의 국가인가를 두고 벌이는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주장할 진보세력이 아닐까?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진보세력 없이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든 복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진보의 실종’이다.

복지를 위한 투쟁의 시동을 건 사회복지 노동자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6개 노동조합이 10월 3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보험 개혁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위)를 결성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무척 뜻깊은 일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중적 바람을 실현시킬 힘을 가진 세력이 무대에 올라선 것이다.

박근혜마저 복지 확대를 말할 정도로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력하지만, 정작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대대적인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박근혜가 내놓은 ‘맞춤형 복지’는 대중의 필요가 아니라 돈에 맞추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고 싶으면 노동자들이 세금을 더 내든지, 돈 내놓기 싫으면 지금 수준에 만족하라는 얘기다.

이 점에서는 안철수도 비슷하다. 그는 어떤 복지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도 없는 데다가, 복지를 늘리려면 ‘보편적’ (노동자)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한편 문제인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려면 상당한 큰 재원이 필요한데도, 선대위 공보단장인 우상호는 부유세 신설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법인세도 노무



10월 11일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공동쟁의대책위원회 총파업 결의대회

현 정부 시절인 21퍼센트까지만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모두 복지 얘기는 슬그머니 감추고 재벌개혁(경제민주화)처럼 노동자·민중에게는 별 실효성도 없는 문제를 크게 부풀리며 정점을 흐리고 있다.

황병대 사회보험지부(건강보험공단) 위원장은 “정치권은 항상 사회보장제도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성과 쌓기에만 이용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총선거까지만 해도 복지가 최대 이슈였는데 지금은 경제민주화에 가려져서 복지가 완전히 논의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 확대[야말로] 사회정부의 재분배 효과를 내서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해요.”

삶의 질

공동대위는 ‘의료민영화 중단’,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확대’와 함께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보면 역대 정권들이 얼마나 사회복지를 뒷전에 미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사회보장기관 노동자들 자체가 공공기관 내에서 임금이 열악한 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자들은 2백80여 개 기관 중에 2백 위 대고, 좀 나은 편인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도 1백70위 대 정도 되거든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건강보험공단만 해도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추가 인력이 1천4백60명이나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정직을 채용하겠다는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새로운 서비스는 늘리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형편이요.”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2012년 말까지 1천2백68명을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을 한다며 4백10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더니, 내년 7월부터는 그마저 53명으로 감축하려 한다.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고서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회보장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를 챙겨줄 수 있단 말인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복지를 늘리려 할 수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돼야 대국민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라는 황 위원장의 지적은 옳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라는 이 노동자들의 요구도 타당하다.

따라서 10월 31일 파업이 꼭 성사되길 바라고 지지한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파업 뒤 민주당 등에 대한 선거 지원으로 나가자는 일각의 주장은 자칫 노동자들을 대선 후보들의 들러리 구실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평균 80퍼센트를 웃도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는 이 투쟁이 더 멀리 나아갈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 힘을 바탕으로 기층에서부터 10월 31일 행동을 건설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행동과 연대를 확대할 때 진정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장호중

진보의 독자적 목소리가 사라지면 안 된다

전지윤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는 대선을 앞두고 나타난 안철수 현상 등을 평가하며 한국 사회가 “존재론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했다. “자살률이 치솟고, 출산율은 매우 낮고 … 가난하고, 과로에 시달리고, 사회적 압력에 짓눌려 있다고 느끼는 한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사람들의 상처에 염산을 뿌릴 것이 뻔한데, 문재인과 안철수도 미답지는 않다. 참여정부 5년의 배신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은 N.L. 문제에서 벌써 우파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이런 민주통합당조차 “근본주의적”이라며 비판하는 안철수는 또 어떤가.

이 둘이 물에 물 탄 듯한 말만 하는 덕분에 박근혜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하다. 둘의 단일화가 갑자기 무슨 대단한 바람과 열기를 일으킬 성싶지도 않다.

이 때문에 진보의 독자적 대안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진보 인사들의 민주당 투항 소식은 씁쓸하기만 하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때 우리 등에 칼에 꽂았던 전 현대차지부장 이경훈이 민주당으로 날아간 것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금속연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지낸 문성현 씨가 문재인 캠프로 간 것은 다르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민주노동당의 전현직 간부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민주당 왼쪽 방?

이들이 부르주아 양당 정치에 맞서며 진보의 독자적 재정립을 추구하기를 포기하고, 한미FTA 체결, 제주 해군기지 첫삽, 쌍용차 매각의 원죄가 있는 당의 후보를 돕겠다고 가 버린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진보정당이 제대로 있었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이라는 문성현의 말이 귀전을 때린다.

실제로 진보정당은 위기와 분열 속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진보정당의 기반인 민주노동당도 힘이 빠진 상태로 대선 방침도 못 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민주노동당이 친자본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해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불씨가 만들어졌고,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에 주된 책임이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과정 속에 불붙었다.

따라서 이런 사태에 책임이 있는 통합진보당과, 여전히 국민참여당과 한집을 꾸린 진보정의당이 반성적 평가를 하기 보다는 서로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 ‘진보도 정의도 아니다’라고 치고받는 모습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5월 19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 살인해고를 자행한 새누리당과도, 쌍용차 매각의 원죄가 있는 민주당과도 다른 진보의 대안을 지켜야 한다.

사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아무리 비판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등보다는 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있다. 이 사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들 정치세력이야말로 부패와 반칙의 상습범들이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대선 후보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한미FTA 폐기, 정리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핵발전 폐기 등의 의제들도 결

코 틀린 요구들이 아니다. 이것은 박근혜는 물론 문재인과 안철수도 말하지 않고 있는 의제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여전히 ‘문지마 야권연대’나 연립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민주당 한테 버림받은 통합진보당보다 진보정의당이 좀더 노골적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실질적 개혁을 위해서 힘을 합칠 용의가 있다”, “새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는 정책

연대뿐 아니라 실천연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진보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려고 출마했다기보다, 중도 사퇴하며 민주당이나 안철수에게 표를 모아 주려고 출마한 것 아니냐는 평까지 나온다.

그러나 <레프트21>이 거듭 지적해 왔듯이 연립정부는 실질적 개혁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쌍용차 살인해고 같은 일을 없애는 게 진정한 ‘실질적 개혁’일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진보의 재구성과 좌파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과는 별개로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등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진보신당도 공조를 모색하는 듯 하다.

이들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이 ‘문지마 야권연대’나 연립정부를 추진하면서 문제를 낳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이런 비판과 주장에는 분명 공감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노동자 투쟁과 목소리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 후보로 나

서서 급진적 의제들을 제시하게 된다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도 여기에 참여하는 급진좌파 활동가들은 좀더 개방적으로 노동계급 대중에 다가가야 한다. 단지 상층 지도부나 이데올로기만 보고 선을 긋지 말고, 기층의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예컨대 학교비정규직이나 에스제이엠 노동자들에 기반해서 투쟁을 이끌기도 한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를 ‘진보가 아니고 함께할 수 없다’라고 간단히 제칠 수는 없다.

대선 투쟁의 요구도 진보진영 공동의 투쟁 과제로 구성하는 게 좋다. 보편적 무상복지, 부자 증세, 정리해고와 비정

규직 철폐,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핵발전 폐기 등이 그런 요구다. 그래서 문재인·안철수 등이 결코 대변할 수 없는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계급적 기반

더불어 ‘문지마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 완주를 원칙으로까지 삼아서 전술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 민주당·안철수 등과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도 비판적 투표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선거주의자와 달리 진정한 좌파한데 중요한 것은 투표가 아니라 투쟁 속에서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친화적인 김기원 교수는 특하면 정리하고 불가피론을 편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이들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와 ‘2013년 체제’에 별로 낄 틈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진보정의당의 유시민은 이미 “다음 정부는 고통을 잘 분담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연립정부는 실질적 개혁을 이를 진정한 동력인 아래로부터 투쟁을 가로막는 구실만 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은 민주노동 전현직 간부들을 캠프에 끌어들이며 ‘일자리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구상하며 노동자들의 양보와 자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문지마 야권연대’를 넘어 아예 진보진영을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 끌어들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것이다. “민주당 세력에 안철수가 상징하는 중도층을 합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진보세력까지 묶어 내는 새로운 수권 정당”을 만들자는 <한겨레> 김의겸 정치·사회 에디터의 주장은 그런 뜻으로 들린다. 대선 이후 민주당이 정계 새판짜기를 하면서 진보를 흡수하려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보진영 일부가 진보진영의 대선 공동 대응을 위해 추진했던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를 위한 진보 연석회’가 사그라들고, 일부 진보 인사들이 문재인 캠프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길하다.

부르주아 양당 구도만 남기고 독립적인 노동자 진보정당의 공간이 소멸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역사적 후퇴다. 진보진영은 대선에서 힘을 합쳐 독자적 목소리를 내면서, 대선 이후 새로운 진보정치 연합체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아야 한다.

고 생각하는 노동자 대중과 소통하며, 그 속에서 좌파의 힘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타협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한편, 다양한 진보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대선 공동 대응 기구나 진보정치 연합체 자체가 ‘변혁적 계급정당’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진보진영의 대선 공동 대응이나 진보 재구성 움직임에 참가해서 운동 건설에 기여하며 영향력을 넓히면서도 분명한 원칙에 기반한 독자적 혁명조직 건설에 힘써야 한다. 진보의 폭넓은 단결과 투쟁이 효과적으로 건설될수록, 혁명조직이 개입해서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보편적 무상보육 후퇴에 단호히 반대해야



출근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러 가는 여성

9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이 정부가 시종일관 사기집단임을 거듭 드러냈다. 이 개편안의 핵심은 모든 영아(0~2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 되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퍼센트에게만 적용되고, 전업주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반일제(6시간) 이용시만 무상보육을 제공받는다. 현행 0~2세 무상보육은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구분 없이 12시간 이용까지 무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개편안을 “실수요자

중심”의 개편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30퍼센트나 전업주부를 ‘실수요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관료적 편익주의와 보수적 가치관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모만이 시설투자의 실수요자라는 시각은 질 좋은 보육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높은 욕구를 무시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한다. 복지 수혜자를 특정 집단에 국한하는 선별 지원 정책은 복지를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라 엘리트들의 시혜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선별 보육 지원 정책은 또한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우파들은 무상보육 시행 뒤 ‘전업주부의 과도한 사용’

으로 맞벌이 부부가 피해를 봤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와 재원 마련 없이 무상보육을 시행한 정부의 책임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선이다. 우파들은 전업주부 속죄양 삼기를 통해 복지정책 후퇴를 정당화하고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한다.

주류 정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무상보육 후퇴에 반대해 이번 연말에는 정부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으므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무상보육 정책은 내년에 다시금 거센 후퇴 압력에 놓일 게 불 보듯 뻔하다.

박근혜만이 아니라 문재인이나 안철수 같은 자유주의 정치인들도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들이 일관되게 보편적 무상보육을 고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안철수 모두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할 대폭적인 부자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진보진영 일각에서 수세적 태도로 무상보육 옹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진보진영의 몇몇 보육 정책 연구자들은 “무상보육이 곧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라며 무상보육을 보편적 복지와 분리하곤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

▶ 7면으로 이어짐

이집트 혁명의 승리의 길

모든 억압과 차별에 맞선 계급적 단결에 있다

2011년 10월 9일, 이집트 군대가 소수 종교인 콥트교(이집트 토착 기독교) 신도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공격했다. 이 마스페로 학살 때문에 27명이 죽었다(관련기사는 <레포트 21> 66호를 보시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사메 나키브가 학살 1년을 맞아 학살 추도 연설을 하며 이집트 혁명의 과제를 다룬다.

이집트 혁명은 험난한 과도기를 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몇몇 부패한 인물들이 제거되고 선출된 사람들이 뽑혔으니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중 하나인 이집트 혁명의 초입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혁명 과정에서 한때 2천만 명이 거리 시위에 참가했는데, 역사상 사람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참가한 혁명은 아주 드물다.

혁명은 시위에 참가한 많은 이들에게 평등과 정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줬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오직 혁명에 맞먹을 만큼 거대한 패배를 겪어야만 일어난다. 혁명이 패배하려면 반(反)혁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집트에서는 그만큼 커다란 반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아직 반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반혁명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집트 국가 기구는 여전히 호스니 무바라크 시절 그대로다. 모든 기구는 차별과 종단 간 갈등, 부패와 착취 위에 지어졌다.

육군 원수 탄타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전직 군정보부 수장을 앉힌 것도 군부를 전혀 바꾸지 못했다. 군부는 이전과 똑같이 권력과 경제 이권을 손안에 쥐고 있다.

이집트 혁명은 대중과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혁명이지만 기독교인, 누비인, 시나이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다. 혁명이 불어넣은 자신감 때문에, 그동안 억압받고 짓밟혔던 모든 이들이 행동에 나섰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느낀 것이다.

사람들이 혁명 초창기의 경험을 순식간에 잊을 리가 없다. 혁명을 새롭게 하거나 2차 이집트 혁명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틀린 까닭이다.

사회정의

지난 두 달 동안 1천4백80건의 파업이 벌어졌다. 혁명 이후 가장 큰 파업 물결이다. 이집트 대중은 여전히 혁명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들은 사회정의와 존엄한 삶을 여전히 원하며 행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2011년 2월 무바라크 반대 시위에 함께 참가한 콥트인과 무슬림 혁명은 종단을 넘어 단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럼에도 종단적 정서가 왜 커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우선 무바라크가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을 도입하면서 필수 공공서비스를 모두 사유화했다.

그 결과 평범한 사람들은 의료와 교육을 어디에서 구해야 했는가? 기독교인은 교회에 가야 했고, 무슬림은 모스크에 가야 했다. 그곳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함께 공공서비스를 누렸던 사람들이 ‘우리’와 ‘저들’로 철저하게 나뉘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기대서 살아야 했다.

이런 일은 당연하게도 사회 최상층에 매우 유리했다. 무바라크 시절 이집트에는 10억 달러[1조 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가 4백90명이나 됐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 모하메드 무르시 하에서도 여전히 억만장자로 남아 있다. 동시에 이집트 인구의 45퍼센트는 빈곤층 이하로 생활한다. 이 사람들 역시 기독교인과 무슬림이다. 이처럼 빈곤은 어느 종교를 갖고 있느냐와 무관하다.

어느 혁명이든, 사회정의를 말하면서도 이런 종류의 계급 모순을 안고 있다면 진정으로 완결된 혁명이 아니다. 이제 갓 시작된 혁명일 뿐이다.

이집트 혁명은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하는 일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 이들의

해방은 사회정의의 필수적 요소다. 여성이 평등을 쟁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누릴 수 없다. 콥트인과 누비인, 지금 이 순간 공중 폭격을 당하고 있는 시나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가 혁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악한 고리

마스페로 학살이 벌어진 까닭도 이 때문이다. 반혁명은 항상 악한 고리를 공격한다. 반혁명은 1백만 명이 운집한 타흐리흐 광장을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인 1만 명이 행진하는 것은 공격할 수 있었다. 이집트 군부는 콥트인이 군대를 공격했다고 떠벌리며 종단 간 갈등을 부추겼다. 일부 살라피주의자들이 이에 호응해서 시위 중인 기독교인을 구타했다.

역사상 모든 혁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유대인이 소수이면 유대인들이 공격받았고, 아르메니아인이 소수이면 아르메니아인들이 공격받았다. 왜 그러한가? 일부 대중이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문제라는 식의 후진적 의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혁명은 이 점을 파고든다.

한마디로 우리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고, 이집트 혁명의 둘째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제를 되살리려고 하는 반혁명 세력도 여전히 권력과 돈을 쥐고 있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다. 이처럼 양쪽 모두

준비 중이다.

어떤 혁명도 억압 받는 이들이 해방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먼저 사회정의를 이룬 다음에 여성이나 콥트인의 권리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청년 콥트인들은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들이 없다면 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종교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반혁명 세력의 무기다. 우리가 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면, 저들은 이 무기를 우리를 향해 휘둘러 줄 것이다. 파업과 타흐리흐 광장 시위를 교회와 모스크 방화, 종단 간 충돌로 대체할 것이다.

사회 해방과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은 중요하게 연결돼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장들은 첫 대응으로 종단 간 갈등을 일으키거나 여성은 애초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퍼뜨린다. 그들은

우리 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 우리는 혁명가로서 이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무슬림 노동자는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과 혁명 운동에 참여하는 계급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말이다. 여성 억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성폭력

반혁명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성폭력과 살라피주의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살라피주의 설교사가 남편이 아내를 구타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러한 여성 혐오는 거리에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은 여성이 거리 또는 작업장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기독교인은 모두 부자라거나 그들이 나라를 강탈했다는 식의 다른 반동적 생각들도 있다. 여성이 남성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종류의 반동적 생각은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접할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슬람주의 운동을 단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들에 반대해 이슬람주의자들이 톨톨 뭉쳤다고 결론 내리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무슬림형제단 소속 사람들이 최근에 벌어진 상당수의 파업을 이끌었다. 그러나 무슬림형제단은 그 파업을 아주 강력하게 탄압했다. 버스 노동자 파업을 이끈 셰이크 타렉은 살라피주의자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무르시표를 7천 명 조직했다. 무슬림형제단이 자신 같은 사람을 대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급 분단은 무슬림형제단과 살라피주의자 안에도 존재한다. 그들은 단일하지 않다.

무슬림형제단의 청년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좌파를 대안으로 택하게 해야 하고, 좌파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슬람 혐오증이 국제적으로 몰아치는 것 역시 이집트 콥트인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슬람 혐오증은 오늘날 유럽 지배자들과 미국 제국주의의 기본 이데올로기 중 하나로 사회의 온갖 문제를 소수의 무슬림 탓으로 돌린다.

청년 콥트인은 이슬람 혐오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유럽에 가길 원하지만, 유럽에서 사람들은 그의 피부색을 보며 그를 무슬림으로 여길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혐오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종교적 차별에 반대하고 연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4호 / 번역 김중환

▶ 6면에서 이어짐

연)과 참여연대도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비판하며 보육료 이원화 계획을 구상 중이다. 맞벌이 가정에는 전일(12시간)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비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6~8시간)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상화하는 방침을 마련 중이다.

물론 여연과 참여연대 등의 주장처럼 이명박의 무상보육 정책은 문제가 많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의 늘리지 않고 현

금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팽창을 대거 촉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어린이집이 총 시설수의 90퍼센트가 넘어 가뜰이나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는데, 이명박 정부는 올해 특별활동비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업자들의 이윤 추구를 더욱 보장했다.

부정·비리투성이 민간어린이집이 판치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을 규제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보육

의 질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어린이집 미이용시에만 지원하는 돈) 대신 보편적 아동수당(특정 연령의 아동 모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여연과 참여연대가 이번 개편안에 담긴 무상보육 후퇴안을 부분 수용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보육료 이원화 계획을 ‘보편적 복지’라고들 주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완화된 선택 지원책이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비맞벌이 가정을 차별하는 정책은 복지를 노동계급과 민중의 필요가 아니라, 마치 국가관료들이 그렇듯이 국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접근법이다.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 건설을 한국에서 거대한 대중투쟁 없이 위로부터 몇몇 프로그램 제시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국가가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쓰는 막대한 자원을 노동계급과 민중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대규모 투쟁밖에 없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무상보육에 대한 우파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단호히 맞서고,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집단적 힘을 지닌 노동계급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정진희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경제가 그리스 경제가 빠진 악순환의 초기 국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영국 전당대회에서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는 큰 문제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었다. 연립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심지어 재정부 장관인 조지 오스본은 재정 적자를 말소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각종 전망들을 보면, 연립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정은 줄고 목표 달성은 힘들어질 것이다. 경제 산출량 대비 적자가 목표 달성의 기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경제가 빠진 끔찍한 악순환의 초기 국면과 유사하다. 현재 그리스는 정부 지출이 줄면서 경기가 하락했고, 그 결과 유럽연합과 IMF가 더 많은 긴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는 더 악화됐고 전반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고통을 초래했다. (유럽연합에 노벨평화상을 안긴 재지 있는 노르웨이 국회의원들이 IMF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해 농담을 완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세계경제도 상황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경제 현황 보고 기사의 제목을 '희망이 공포와 불확실성으로 바뀌다'로 잡았다.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각종 정부가 경제에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또, 2010년부터 세계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

그러나 이 회복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IMF는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선진 경제가 1.5퍼센트, 개발 도상국이 5.6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예측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른바 '신흥 시장 경제들'은 상황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성장률도 하락할 것이다.

물론, 결정적으로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2008년] 경기 불황에 대응해 국영은행들이 자금을 제공하는 6천4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경제는 급속히 회복됐고, 중국에 원재료와 첨단 자부재를 수출하는 나라들(전자의 경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후자의 경우 독일과 한국)의 경제도 덩달아 회복됐다.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성장률도 하락하고 있다. IMF는 내년 중국 경제가 7.7퍼센트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선진국 기준에서는 매우 높지만 2008년에 비해 30퍼센트 낮으며 1999년 이래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다.

중국

북반구 나라 경제가 정체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의존 부분이 타격을 받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중국 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투자가 더는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파라서 브라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거대 '신흥 시장'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디커플링'한 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 또는 세계경제 흐름과 달리 독자적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했고 이들이 자체 동력으로 세계경제를 이끌 것이란 설부터 주장들은 공문구인 것으로 판명됐다. 중국뿐 아니라 다른 브라스 국가들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에 정부 재정적자를 먼저 줄여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재정적자는 불황에 대처 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당면한 문제는 미국의 이른바 '재정 절벽' 즉, 올해 말에 증세와 지출 삭감이 실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의 4퍼센트가 줄어든 것이다. '재정 절벽'은 2011년 7월 미국 정부 부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와 공화당이 합의했던 것이다.

각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금융 부분에 공급했다. 정치 엘리트들이 재정적자 해소에 몰두하면서 형성된 공백을 때우려 시도했다. 현재까지 6조 2천만 파운드[1경 9백1조 200 원]가 여기에 쓰였다.

그러나 엄청난 민간 부채가 쌓이면서 위기가 촉발됐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된 돈들은 쓰이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악성 부채를 가진 은행들은 대출하지 않으려 하고, 빚더미에 올라선 기업과 가계는 돈을 새로 빌려라 하지 않는다.

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는 '열여덟년 10년'이 도래할 것을 우려했다. 마르틴 라스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말했듯이 "세계경제는 대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유럽 노동자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파업과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10월 18일 유럽연합 정상 회담에 맞춰 총파업을 벌였다. 긴축에 반대하며 2주 만에 벌어진 총파업이고, 독일 총리 메르켈 방문에 항의해 30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인 지 얼마 만이다.

공무원 파업으로 상당수 공공기관이 업무를 보지 않았다. 대중교통과 비행기는 물론, 택시와 섬을 오가는 여객선도 멈췄다. 의사와 교사도 파업에 참가해 병원은 일부 응급실만 운영됐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언론 노동자들이 전날 파업을 벌여 신문이 나오지 않았고, 가게들도 영업하지 않았다. 아테네에서만 7만 명이 모여서 긴축은 더는 안 된다고 시위를 벌였다. 언론은 한 시위 참가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두고 폭력시위 운운한다. 그가 6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러 나온 65세 노동자였는데도 말이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느낀다. 한 노동자는 “포르투갈에서는 단 하나의 긴축안을 두고 [1백만 명이라는] 큰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번 임금과 연금이 깎이고 세금이 올랐다. 아직까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스페인에서도 수천 명이 긴축에 항의하는 범민당 총리와 전직 사회당 총리가 각각 84퍼센트와 90퍼센트 불신을 기록한 반면, 좌파연합당의 지지율은 13퍼센트로 경중 올랐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동차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지키려고 시위를 벌였다. 사회당 올랑

드 정부는 파리모터쇼를 보호한다며 최루탄을 쏘며 이들을 탄압했다. 영국에서도 긴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준비 중이다. 영국 활동가들은 이 시위가 보수당 정부에 반대하는 총파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조직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긴축에 대한 불만과 분노는 분리 독립 요구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분리 국민투표 일정이 잡혔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는 1백만 명이 분리를 요구하며 행진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에서도 분리독립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노벨위원회가 “평화와 화합, 민주주의, 인권 증진”에 기여했다며 유럽연합한테

노벨평화상을 수여해서 빈축을 샀다. 유럽연합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유럽연합이 긴축을 강요한 결과 파시즘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충분하다.

그리스에서는 파시즘 정당인 황금 새벽당을 지지하는 경찰이 나치 반대 활동가들을 고문하기까지 했다. 영국에서는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는 영국수호동맹의 파시스트들이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파시즘에 반대하는 운동도 성장하고 있다.

그리스 반파시즘동맹이 새로 결성돼 황금새벽당에 반대하는 활동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0월 28일, 무

솔리니 군대를 패퇴시킨 기념일에 파시즘과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 중이다.

영국의 반파시즘동맹은 파시스트들이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전국 활동가들을 집결시킬 계획이다. 반파시즘동맹은 9월에 도 맞불 집회를 개최해 파시스트들을 위축시키고, 활동가 4천여 명이 파시스트 2백 명과 이들을 비호하는 경찰을 가로막아 굴욕을 준 바 있다.

좌파는 노동자들이 긴축과 파시즘에 일관되게 싸울 수 있는 방법과 진정한 사회변화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김종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최용찬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최용찬

을 하고 있고 이 점이 큰 위기를 낳고 있다. 스코틀랜드 대학들의 신입생 환영 기간에 노동당 그룹들은 '대영 제국' 국기인 유니온잭을 나눠 줬다! 그러나 독립 논쟁 때문에 사방에서 벌어지는 긴축에 맞선 투쟁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위험도 있다. 또 독립 찬성 운동이 노동조합들과 긴밀하지 않다는 위험도 있다.

긴축 반대 정치가 공식적으로 독립 찬성 운동의 핵심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달 1만 명이 모인 독립 찬성 집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대열은 긴축

'대영제국' 한편 노동당은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보수당과 똑같은 말

미국 대선

오바마와 롬니보다 더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

조너선 날 미국 출신 영국 사회주의자, (두 개의 마라(핵킬패) 저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자원 활동가들은 11월 6일 투표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다.

내 친구 다니는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내 '좌파' 엘리자베스 워렌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밤 전화를 돌린다. 다니는 전화받은 사람이 정치인 응답을 하면 그 통화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고 한다. 나쁠 때는 전화받은 사람들이 다니에게 욕을 퍼붓기도 한다.

사람들은 화를 낼 만하다. 오바마 정권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부국이 더 불평등해졌다.

꼭대기 5퍼센트는 잘 지냈지만,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 부시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실업률이 5.8퍼센트였다.

지금은 실업률이 거의 8퍼센트로 뛰었고, 또 다른 8퍼센트는 전일제 직장을 원하지 않기로 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지만, 정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사실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육, 의료,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

희망

지난 5년 동안 상황이 점점 나빠졌고, 몇 년 안에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가 말한 '변화를 위한 희망'에 열광했다. 이제 사람들은 속았다고 느끼고 있다.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고, 민주당 뉴딜파 [루스벨트의 '뉴딜'을 본받아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좌파']도 아니다. 오바마의 고위 경제 보좌진은 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며, 오바마는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진수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

10월 초부터 약 3주 동안, 미국 전역의 월마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다. 동쪽 끝 메릴랜드에서 서쪽 끝 캘리포니아까지, 월마트 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뛰쳐나와 창고를 점거했다.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은 6만 2천 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 물류창고를 점거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했다. 시카고 교사들을 비롯한 다른 노동조합의 연대도 줄을 이었다. 그 결과 월마트 노동자들은 적정 노동 시간, 직장 내 성희롱과 관리직의 괴롭힘 방지 등의 쟁점에서 승리를 따냈다. 파업 기간 임금도 받아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마치 이 파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의 위기가 미국 노동자·민중을 투쟁으로 내몰았다.

오바마가 임기를 시작한 2009년 초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더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여성 명 중 한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특히 노숙 아동의 숫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조처는 누더기다 뚫겨나(의료보험), 효과가 미미했다(1인당 15만 원 정도의 식량보조금).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미국인들은 투쟁에 나섰다. 교육에 산 삭감에 맞선 대학생 수만 명의 투쟁, 우익 정치단체 '티파티'에 맞선 20만 위싱턴 행진,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맞선 30만 시위,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무지개' 행진 등 대규모 대중 집회가 계속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전투적 파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위스콘신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지키기 위해 주의 회를 점거한 것을 시작으로, 교원평가에 맞선 최근의 시카고 교사 파업에 이르기까지 투쟁이 계속됐다. 월마트 같은 전국적 대기업부터 소규모 지역 레스토랑 체인점까지 크고 작은 작업장에서 파업들이 계속 벌어졌다.

오바마가 임기를 시작한 2009년 초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더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여성 명 중 한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특히 노숙 아동의 숫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조처는 누더기다 뚫겨나(의료보험), 효과가 미미했다(1인당 15만 원 정도의 식량보조금).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미국인들은 투쟁에 나섰다. 교육에 산 삭감에 맞선 대학생 수만 명의 투쟁, 우익 정치단체 '티파티'에 맞선 20만 위싱턴 행진,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맞선 30만 시위,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무지개' 행진 등 대규모 대중 집회가 계속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전투적 파업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해 위스콘신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체교섭권을 지키기 위해 주의 회를 점거한 것을 시작으로, 교원평가에 맞선 최근의 시카고 교사 파업에 이르기까지 투쟁이 계속됐다. 월마트 같은 전국적 대기업부터 소규모 지역 레스토랑 체인점까지 크고 작은 작업장에서 파업들이 계속 벌어졌다.

오바마가 임기를 시작한 2009년 초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더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여성 명 중 한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특히 노숙 아동의 숫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조처는 누더기다 뚫겨나(의료보험), 효과가 미미했다(1인당 15만 원 정도의 식량보조금).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미국인들은 투쟁에 나섰다. 교육에 산 삭감에 맞선 대학생 수만 명의 투쟁, 우익 정치단체 '티파티'에 맞선 20만 위싱턴 행진,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맞선 30만 시위,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무지개' 행진 등 대규모 대중 집회가 계속 일어났다.

오바마가 임기를 시작한 2009년 초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더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여성 명 중 한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특히 노숙 아동의 숫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조처는 누더기다 뚫겨나(의료보험), 효과가 미미했다(1인당 15만 원 정도의 식량보조금).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미국인들은 투쟁에 나섰다. 교육에 산 삭감에 맞선 대학생 수만 명의 투쟁, 우익 정치단체 '티파티'에 맞선 20만 위싱턴 행진,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에 맞선 30만 시위, 전국적으로 4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무지개' 행진 등 대규모 대중 집회가 계속 일어났다.

오바마가 임기를 시작한 2009년 초만 해도 미국 전역에 희망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더 노동부의 공식 통계로도 여성 명 중 한 명이 '식량 불안전' 상태, 즉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 특히 노숙 아동의 숫자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 조처는 누더기다 뚫겨나(의료보험), 효과가 미미했다(1인당 15만 원 정도의 식량보조금).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역전해 8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이고, 오바마가 2009년까지만 해도 정평당에도 약속한 판타나모 수용소는 아직 설립 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부시의 '일방주의' 전략과 대비되는 '다자주의' 전략을 추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가 얼마간 다자주의적 연사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방적'이라는 오바마가 당선하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결코 반전평화 대통령이 아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전일 2기 정권의 대외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무인폭격으로 공습하는 것은 부시 정부가 시작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더욱 강화했고, 이제는 예멘과 소말리아에서도 자행된다.

오바마 자신 또한 진지하게 '일방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바마는 이미 2007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력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최용찬

바로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줬다. 이것이 밋 롬니가 인기를 끄는 말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우익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와 부통령 조 바이든은 TV 토론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는데, 그전 그들이 할 말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옹호한 의료보험 개혁은 사람들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다른 쟁점에서는 임기 기간의 업적이 라고 내세울 것이 없었다. 오바마는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수치스러워 보인다. 민주당은 롬니가 되면 더 나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여론조사에서 아직 둘은 막상막하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보다더는 더 나은 대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진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미국 노동계급은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메이데이의 기념이 된 여성 노동자 파업, 연좌파업의 개헌을 제시한 1930년대 자동차 노동자 투쟁,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물결, 1960년대 저항 분위기에 서 벌어진 수많은 살쟁이 파업 등.

하지만 미국 운동은 민주당에 의존하는 오랜 '전풍' 탓에 번번이 발목을 잡혀 왔다. 강력한 연좌파업의 기를 꺾고 루스벨트 정권과 협상해서 합법적 노조 운동을 전개한 공산당과 노조 지도부는 전후 매카시즘 광풍에 제대로 저항도 못 하고 박살이 났다.

지난 세기 내내 미국 민주당은 운동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이용해 운동을 통제했고, 주류 정치에는 '더 나빠 보이는 나쁜 당'(공화당)과 '덜 나빠 보이는 나쁜 당'(민주당)밖에 남지 않게 됐다. 1960년대 같은 예외적인 몇 해를 제외하면 좌파들은 약화되고 분열을 거듭했다.

다행히 '점거하러' 운동을 비롯해 새롭게 떠오르는 운동의 좌파 진영은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중 일부는 미국 녹색당 선거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다. 미국 좌파들은 성장하는 투쟁들을 서로 연결하고 전국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김진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역전해 8만 명이 넘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이고, 오바마가 2009년까지만 해도 정평당에도 약속한 판타나모 수용소는 아직 설립 중이다. 오바마는 집권 초기에 부시의 '일방주의' 전략과 대비되는 '다자주의' 전략을 추구한다고 했다. 실제로 그가 얼마간 다자주의적 연사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다. '일방적'이라는 오바마가 당선하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결코 반전평화 대통령이 아니다. 그의 대외 정책은 전일 2기 정권의 대외 정책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무인폭격으로 공습하는 것은 부시 정부가 시작했지만 오바마 정부가 더욱 강화했고, 이제는 예멘과 소말리아에서도 자행된다.

오바마 자신 또한 진지하게 '일방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오바마는 이미 2007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유지해야 하며 ...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력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바로 그런 자들에게 권력을 줬다. 이것이 밋 롬니가 인기를 끄는 말은 아니다. 사람들은 모든 정치인들에게 화가 나 있고, 사람들 대부분이 우익인 것도 아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325호 / 번역 김용국

출처 영국 반자본

‘부실’대 선정에 맞서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강요해 온 대학 당국 때문에 학생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부실’ 대학으로 선정된 국민대 이아혜 씨(‘부실’대 학선택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가) 연락 간사)와 세종대 이정익 씨(함께하는 학생공동체 힐링세종 활동가)를 만났다.

부실대 선정 이후,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아혜 한마디로 ‘멘붕’이 됐죠. ‘어렵게 공부해서 대학에 왔고, 빚 저가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녔는데, 부실대 선정이 되다니’ 하고 참담해 했어요.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글까지 올라왔고, 편입 이야기도 많았죠.

이정익 [세종대에서] 부실대 선정은 비리 재단 3년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비리 재단이 복귀하고 학내에서 끊임없이 일들이 있었는데, 부실대 선정까지 되자 “아, 이것도 또 오는구나” 했죠. 특히 취업 준비생들이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두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은 어떻습니까?

이정익 비리 재단 복귀 이후 등록금이 5퍼센트, 4.5퍼센트 가파르게 올랐죠. 지난해 전국적인 등록금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세종대는 고작 1천 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내에 엄청난 상업 시설이 들어왔어요. 학생회관 지하 1층부터



이아혜 국민대 대책위 연락 간사

국민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서울시 대학 중 최하위예요. 수강신청을 못해서 졸업을 못한 사례도 있죠.



9월 10일 ‘부실’대학 선정에 항의하며 민주광장을 점거한 국민대 학생들

3층까지 전부 상업 시설이에요. 푸드 코트, 파리바게트, 카페베네, 편의점, 피씨방, 심지어 애플 몰류센터까지 있어요.

비리 이사장이었던 주명건(현 명예 이사)이 지난해 퇴임한 총장에게 “나는 재벌이 될 거다. 세종 그룹, 계열사를 만드는 게 내 꿈이다”고 말했으니 말 다 했죠.

이아혜 국민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서울시 대학 중 최하위예요. 수강신청을 못 해서 졸업을 못 한 사례도 있죠. 5분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끌어와야 해요. 게다가 올해 등록금을 1.9퍼센트 인하하면서 강의료를 약 1백 60개를 없앴어요.

학교 당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이정익 학교에서 발표하는 조처들은 진정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지난해 하기로 한 ‘장학금 30억 원과 복지기금 5억 원’이 올해 지표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이게 지표에 잡힐 테니 장학금 지급률이 오를 것이라고 했죠. 전임교원도 걸린 만큼 딱 보충하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부실대 선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비리 재단이 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이아혜 학교 당국은 일단 취업률을 올리겠다는 학생들을 중소기업에 넣고 보려고 해요. 수업 시간마다 교수들이 “중소기업도 경력이 된다”, “눈높이를 낮춰라” 하고 얘기해요. 학생들의 미래와 진로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전임교원도



이정익 세종대 ‘힐링세종’ 활동가

지난해 전국적인 등록금 인하 분위기 속에서도 세종대는 고작 1천 원을 내렸습니다.

77명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사립대 평균보다 한참 밑이에요. 게다가 그중 70퍼센트를 비정규직으로 뽑는대요.

심지어 학교가 얼마 전에는 전체 학생들에게 ARS 전화로 학교에 5천 원을 기부하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일제히 이 문자를 받은 거죠.

이렇듯이 정부의 부실대 선정 정책은 실제로 부실한 대학 환경을 바꾸기는 커녕, 대학들이 핏수를 부리게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정익 일단 지표에 문제가 많아요. 진짜 중요한 법인 지표는 반영 비율이 적고, 취업률이나 총원율은 높아요. 이 정책은 재단이 부패하고 부실한 대학들을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아혜 저도 공감해요. 취업률이 낮다고 부실대 선정하면 더 취업 안 되고, 총원율이 낮다고 부실대 선정하면 학생들이 더 원서를 안 써요.

그러면서 애꿎은 학내 구성원들만 고통받아요. 지난해 원광대처럼 취업률을 높이려고 학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자기 학과가 없어지는 일을 당하기도 해요. 일자리가 없는 건 정부 책임인데 왜 학생에게 떠넘기는 거죠?

비단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전체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이죠. 이것

은 대학을 기형적으로 만들고 학문을 고사시키는 정책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조처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아혜 교육 비용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재단이 비리를 저지르고 아무런 투자를 안 해도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 게 진정한 문제죠. 정부의 부실대 선정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해요. 그리고 진짜 부실한 대학은 정부가 국립화를 해야 해요.

대학 당국에게도 이번에 불거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해야 해요.

이정익 사립대 전체를 감사해 비리 재단들을 전부 규제해야 해요. 세종대에서도 일단 비리 재단을 몰아내야 해요. 그리고 비리 재단 복귀 이후 과도하게 올린 등록금, 미지급된 장학금 등을 모두 학생에게 반환해야죠. 학내 상업화 계획도 중단해야 해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아혜 부실 대학 선정 이후에 학생들이 학내 집회를 열고 총장실을 점거했어요. 9월에는 법대에서 학생 총회가 성사되기도 했죠.

최근엔 학생 6백50명이 전체 비상 학생 총회를 발의했어요. 10월 25일에 총회가 열릴 예정이죠. 지금 총학생회는 ‘학교 답변을 기다려 보자’며 총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겁니다.

이정익 사실 세종대는 비대위가 너무 학교 친화적이어서 학생들이 불만을 모으는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학교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생들의 불만을 모으는 구실을 ‘힐링세종’이 해보려고 해요.

이아혜 국민대 대책위와 힐링세종, 송호대 총학생회,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함께 발의해 ‘부실대 선정과 대학 구조조정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학생 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있어요. 이 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각 대학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는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인터뷰·정리 성지현

※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보수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의제가 부각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틈만 나면 복지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고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헛소리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그리스는 21.3퍼센트, 스페인은 21.6퍼센트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언론들은 그리스인들을 마치 베퍼지처럼 묘사했지만 그리스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천1백 시간으로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독일 1천4백 시간에 견줘 1.5배나 된다.

또 일각에서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 임금 상대적으로 높아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2003년 그리스의 노동소득분배율은 36퍼센트, 이탈리아는 42퍼

센트로, 74퍼센트인 독일에 비해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였던 유로존 통합 자체의 모순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만나 폭발했기 때문이다.

1999년 유로존 통합은 독일 자본가들에게 큰 기회였다. 남부 유럽 국가들과 통합해 화폐가치가 떨어진 덕분에 독일 자본가들은 수출에서 크게 이득을 보며 막대한 수익을 누렸다. 독일 수출의 60퍼센트는 유로존 내 다른 국가들에게 이뤄졌다.

반면 화폐가치가 올라간 남부 유럽 국가들은 수출에서 손해를 봤고 무역 적자가 쌓였다.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의 상품수지 적자액 중에 유로존 내에서 발생한 것이 90퍼센트가 넘었다.

한편 통합을 통해 남부 유럽 국가들이 빌릴 수 있는 금리는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은행가들과 투자자

들은 값싼 신용을 이용해 투기 거품을 일으켰다. 이윤율이 낮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남부 유럽 국가들이 먹잇감이 된 것이다.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등에서 부동산 거품이 일었고 이에 편승한 은행과 부자들은 큰 이익을 봤다.

문명이 후퇴하는 듯한

남부 유럽 국가에 자금을 빌려 준 곳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의 은행들이었다. 독일 등 유럽 중심부의 자본가들은 무역 흑자와 함께 자본 수출로 막대한 수익을 누린 것이다.

마치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고, 중국은 벌어들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해 쌍둥이 적자가 벌어지며 세계경제가 굴러가는 것과 같은 그림이 유럽 내에서 벌어졌다.

이런 구조에서 부자들은 이득을 봤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고통받았다. 거품과 인플레이션 속에 2000~2008년에 그

리스인들의 생활비는 35퍼센트나 올랐다. 값싼 신용에 의지해 투기를 벌인 그리스 국가의 부채도 치솟았고, 거품 속에 스페인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빚도 1999~2008년 10년 동안 세 배로 늘었다.

이런 거품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으며 터진 것이다.

위기가 터지자 남부 유럽 국가들에 돈을 빌려 준 독일과 프랑스 등의 은행과 자본가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혈안이 됐다. 투기를 통해 이제까지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흡혈귀처럼 들러붙어 긴축을 채찍질하며 빚갚기를 강요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스페인 등에 구제금융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결코 가난한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는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1백50퍼센트일 때 국제 금리 6퍼센트를

적용하면 GDP의 9퍼센트를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 정부 세수의 25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유지 불가능한 비율인데 이미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GDP의 1백6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주의자 소티리스 콘토야니스가 말했듯 “현재 그리스의 대형 은행 7개와 유럽 은행 서른 개가 그리스 공무원 전원과 연금 생활자들이 받는 것만큼이나 많은 돈을 이자로 챙겨가고 있”는 동안 그리스와 스페인 민중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문명이 후퇴하는 듯한 경험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과 자본가들이 강요하는 야만적인 빚 갚기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남부 유럽 국가들의 위기는 결코 노동자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거품으로 이득을 본 자들이 그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

정선영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인터뷰

“벌써 58명이 죽은 지금, 이제는 정말 응답할 때”

주류 언론이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경쟁에만 눈이 팔려있는 동안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권리를 지키고 끔찍한 실태를 고발하려고 5년 넘게 싸워온 유가족과 활동가 들은 최근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에 크게 기여해 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동지를 인터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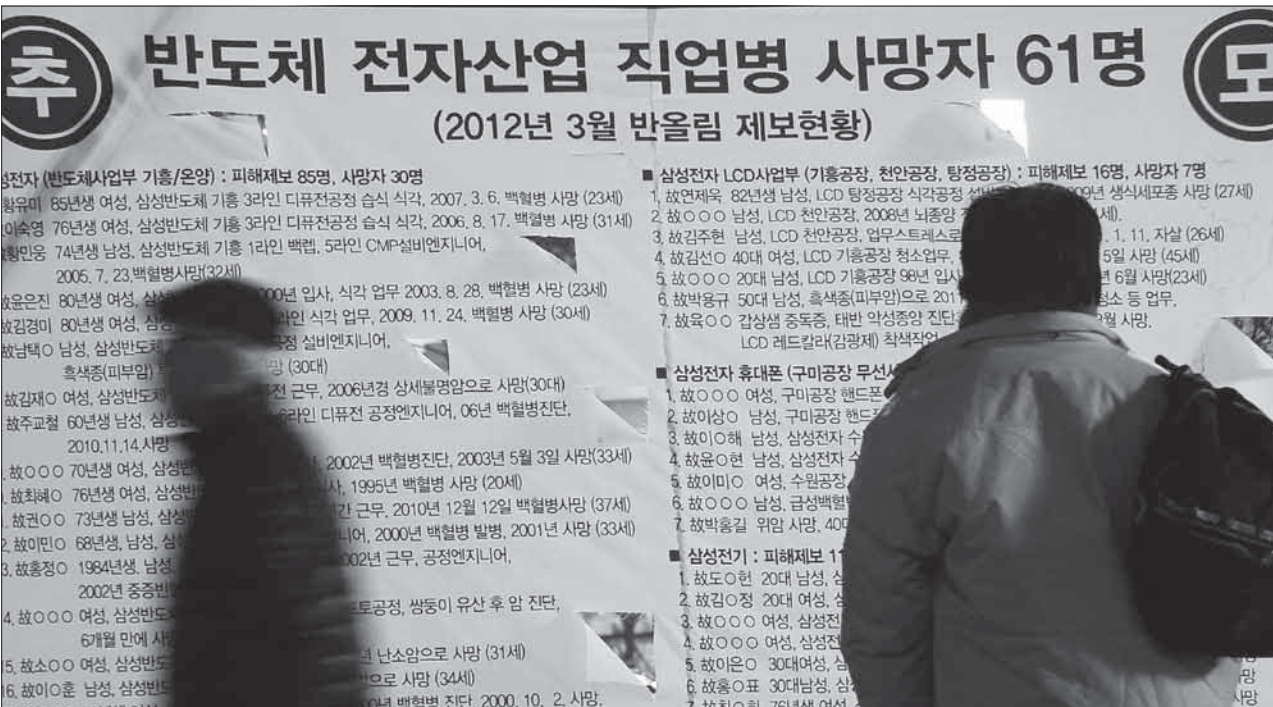
“똑같은 죽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만 벌써 네 명의 삼성 노동자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몰랐던 두 분이 또 있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고 이경희 님이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폐암에 걸려 사망했고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고 박효순 님도 있어요. 악성 림프종으로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난 8월, 28세의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이예요. 그 숫자가 이미 58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세상이 참... 방에 이렇게 누으면, 쭈어서 돌아가신 그 분들 모습이 떠오르고,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9월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또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 분은 삼성반도체 15라인 클린룸 안에서 일했는데, 그 15라인은 최신 라인이었거든요. 자동화된다고 해도 위험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이걸 보여 주는 상징적인 피해자가 또 나타난 거죠. 용인에 있는 삼성반도체 납땜업체에

선 집단 발병이 발생했어요. 굉장히 작은 영세업체들이 반도체 도금 업무를 하는데 도금은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청으로 넘겨졌고, 그 하청 노동자들이 한 20여 명 근무하던 곳에서 4~50대 여성 노동자들 다섯 명이 암인 거예요. 네 분이 유방암이고, 한 분이 폐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하시는 얘기가, 자기네는 환기가 요만큼도 안 된다는 거야. 이 분들, 납땜도 하고 고온에서 납을 녹이고 다시 입히는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온갖 유기용제들, 화학물질들을 쓰는데, 그것 때문에 구토, 어지럼증 같은 게 심해지고, 정말 쓰러질 뻔한 경험도 많이 했고, 손끝 허물이 다 벗겨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납땜할 땐 연기가 나요, 거기 그 연기가 자욱하대요, 그런데 삼성이 보안 문제 때문에 환기를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끔찍하죠.

그런 데서 암이 많이 발병하는 거죠. 위험이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심화되고. 그런데도 삼성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협력업체 일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가중스런

삼성과 언론의 더티 플레이는 정말 신물이 나요. '삼성과 백혈병 피해자의 대화'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는 정말 많이 분노했어요. 반올림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갑자기 대화나 보상이니 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튀어나온 게,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에 있거든요.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관련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일부 이기고 일부 졌는데, 지금 1심 때보다 증거가 더 보강되고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판결 없이 조정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까 봐,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산재 인정하라고 달려왔는데, 그걸 한꺼번에 '보상 프레임'으로, 우리가 마치 삼성에게 보상해 달라고 달려온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물론 삼성은 보상을 해야지. 하지만 이런 완전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갑자기 우리도 모르는 대화라



삼성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곳곳이 진실을 알리고 투쟁해 온 노동자·활동가들 덕분에 “세계 일류 기업” 삼성의 추악한 맨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니요, 죽은 자들더러 떡고물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취급 당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정말 생떼같은 목숨들을 다 잃었는데,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흘리는 건 너무하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야. 거기다가, 삼성이 왜 언론플레이를 했냐 하면, 다음날 삼성전자 최우수 부사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미 대화 시작했다' 하는 식으로 깔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감은 실망스러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야당 의원들도 삼성 부사장에게 '앞으로 잘 좀 보세요' 하는 정도의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피해자 두 분이 정말 어렵게 나갔고 이게 수년간 문제가 돼 왔는데, 의원들에게서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야. 심상정 의원 정도만 세계 발언했죠. 지금 반올림의 투쟁 슬로건이 '응답하라, 2012!'. 정말, 응답해야 돼요. 이미 얼마나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죽으면서 억울함을 고발했는데, 이게 얼마나 반복됐는데. 최초 산재 신청자 고 황유미 씨(삼성 백혈병 사망자) 이후로 벌써 1백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벌써 58명이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든 대선 후보들이든 이제 정말 응답할 때다. 제대로 행동을 보일 때다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삼성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를 만났어요. 저는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당연히 우릴 만나려 와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물론, 대선 후보들의 한 번의 행보나 정치권의 관심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피해 노동자나 이 분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정치권도 관심을 갖고, 사법부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 피해자들이 삼성 측의 회유·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싸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하면서 회의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니까 달라졌어요. 심지어 학계나 의학 전문가들도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투쟁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죠. 우리는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을 하고, 내부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리 싸움에 지지를 보내 줬으면 합니다.

인터뷰·정리 박설



반올림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철도·가스·전력 민영화,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중단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곧 있을 대선과 내년 공기업 예산편성을 앞두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 관련 노조 6개가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관련기사 5면), 가스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단체협상 결렬로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측의 노골적인 희생 강요에 신음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위협해 왔다. 예컨대, 올해까지 추진된 공기업 정원 2만2천 명 감축은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4대보험 통합 징수로 업무량은 대폭 늘었지만,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자) “얼마 전 수의선이 개통됐는데, 인력 충원을 안 합니



10월 13일 전국철도노동자 총궐기대회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만 죽어나는 겁니다.”(철도 노동자) 그런데도, 실질임금은 더 깎이고 있다. 정부는 2009~2010년에 공기업 임금을 동결했고, 지난해와 올해엔 고작 4.1퍼센트, 3.9퍼센트만 올렸다. 물가 상승률에

견줘보면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질임금 보장 못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복지금급 출연마저 막했습니다. 철바통이 임금을 갖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가스공사지부) 더구나 계속되는 정부의 민영화 시도는 공공서비스 후퇴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에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설물 회수를 추진하다가, 지배자들 내부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투쟁 채비에 부딪혀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위기를 반영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시도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대선 이후 다시금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새누리당도 시기와 방법을 문제삼을 뿐 민영화 자체에는 찬성한다. 더구나 정부는 지금 국회 동의조차 없이 도시가스법 시행령만 뜯어고쳐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발전·산업용 가스 사업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얼마 전 의료 민영화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전력 산업에서도 민간 발전사를 더 늘리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게다가 한국전력 측은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제소까지 검토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힘썼고, 올해 10퍼센트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철도공사 측은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 가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열망도 짓밟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같은 불만과 요구를 모아 10월 31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치권이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안정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대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박설

2012년 반달공동행동

응답하라, 2012!

미션 하나, “사람 찾기 함께해요”

반도체 직업환경을 진술하거나, 제보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장안석 010-9002-8563

미션 둘, “탄원서에 함께해요”

직업병 인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힘을 주세요!

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팩스 02-324-8632,

이메일 shaps@hanmail.net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호봉제를 도입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호봉제,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와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상시적 차별로 고통 받아 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그동안 정부는 마땅히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왔다. 학교 내 비정규직 비율이 25퍼센트에 이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퍼센트 이상이 학교비정규직일 정도로, 학교는 비정규직 확산의 온상이 됐다.

또한 정부는 정규직 교사-기간제 교사-시간제 강사, 정규직 영양교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처럼 노동자들을 줄 세우고, 그 속에서 학교비정규직에게 ‘잡무 담당’, ‘보조 인력’이라는 인격적 모멸을 안겨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1조 8천2백38억 원이 들어 “큰 부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부자 감세에 90조 원, 4대강 사업에 60조 원, 국방비에 매년 30조 원을 퍼부으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돈이 아깝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평범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과부는 ‘국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과부장관’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진보교육감을 제외한 10여 곳의 교육감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교섭 요구조차 무시하는 교과부가 2014년까지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며 마치 대단한 양보라도 한 양 발표한 것도 역겹다. 이미



8월 2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 교사의 연대를 바란다.

1월에 노동부가 2012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으니, 교과부 발표는 이를 2년이 나 늦추겠다는 말일 뿐이다. 게다가 호봉제 같은 실질적 처우 개선도 빠져 있다. 경쟁교육과 전교조 탄압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외면하는 이주호는 퇴진해야 마땅하다.

노동자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의 미덥지 않은 태도도 문제다. <민중의 소리>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약속한 공무직 전환 입법을 미루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명운을 걸겠다”며 교육 공무직 전환 법안 처리를 거듭 약속해 온 문제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비정규직 확대와 탄압에 공조해 온 민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일관되게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조건

따라서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투쟁이 중요하다. 11월 3일 도심 시위와 11월 9일 하루 파업을 강력하게 조직해야 한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투쟁 조직에 매진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바라는 사회적 여론과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위기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물론 전국 5천여 학교에 몇 명씩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 측의 탄압을 무릅쓰고 투쟁과 파업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난 2년간 노조가 급속

히 성장해 간부들이 부족한 것도 어려움인 듯하다.

따라서 사회적 연대를 건설해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예상되는 탄압에 대응해야 한다. 2백여 교육 관련 노조와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2013 교육연대’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이 그런 구실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교사들은 학교장의 탄압으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나은 조건에 있다. 함께 일하는 정규직 교사가 자신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최근 정부가 교원 정원 기준을 삭제하며 교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데, 학교비정규직과 연대해 정부에 맞설 때 정규직 교사도 힘있게 싸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11월 3일 집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반갑고 고무적이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에서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자신들의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함께하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조명지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

교원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 중단하라

지난 5년 동안 교육 현장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더러운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경기·강원교육청을 특별감사하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전현직 교장 2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세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1백6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교원의 법정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고하기도 했다. 현재의 교원 법정 기준인 ‘학급당 일정한 교원 수’를 삭제하고, 예산과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수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과전담·보건·전문상담·사서 등의 교사를 배치 기준도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아 오던 정부가 이제는 아예 법을 없애 버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 심화에 따라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교원 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교원정원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학교통폐합



5월 19일 전국교사대회 법정정원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을 강요당할 것이 자명하다. 실제 전북도 교육청은 “교원 배치 기준이 학생 수로 바뀌면 현재 78퍼센트에 그친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20퍼센트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교과전담·보건·전문상담·사서 등의 교사를 배치 근거가 없어지면, 교사들의 수업 시수 확대와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의 교육여건은 학령 인구의 자연감소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

중등교사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70퍼센트대

로 떨어져 현재 78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특수교사는 55.9퍼센트에 불과하다. 법정정원에 따라 부족한 교원 수가 무려 4만여 명에 이른다.

2012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한국은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인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에 달한다.

교사들이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학생 숫자가 너무 많으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정정원은 교육의 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전교조

와 교육운동 단체들이 교사 법정정원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싸운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오직 경제 논리만 앞세워 경쟁교육을 강화하며 교육을 황폐화하고 있다.

정부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에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로 하고, 교총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 교과부의 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대중행동

반갑게도 전교조와 교육운동 단체들이 곧바로 투쟁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조합원 투쟁 지침을 내렸다. 10월 22일부터는 법정정원 폐기 시도와 다른 현안 쟁점을 묶어 집회와 농성을 시작한다. 그리고 11월 3일에 예정된 ‘2013 새로운 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에 대규모로 모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다만, 전교조 계획이 지나치게 상충 지도부 농성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교과부의 법정정원 폐기 시도는 교원의 불안정성 강화, 수업시수 확대, 작은 학교 통폐합 시도,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는 시도여서, 기층

교사들의 반발이 상당하다.

또, 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 임용고사라는 비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분노도 크다.

교사 활동가들은 기층 교사들과 더 많은 노동자·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계획을 촉구하고 건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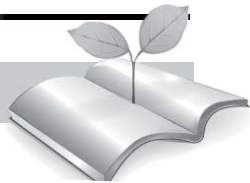
이미 일부 활동가들이 ‘법정정원 폐기 시행령 반대, 법정정원 1백 퍼센트 충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은 더 확대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교원평가 거부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입력 거부 같은 현장 투쟁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오는 11월 3일, ‘2013 새로운 교육실현국민연대’가 주최하는 ‘범국민대회’에 교사들의 불만과 투쟁을 결집시켜야 한다. 이날 전교조와 파업을 준비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교육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을, 차별이 아닌 지원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행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진보적 교육개혁 과제들이 올해 대선 등에서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

박성환



정옥식 지음, 서해문집, 1백84쪽, 1만 원

서평 |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

왜 제주 해군기지는 위험천만한 ‘인화물질’인가

많은 사람들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보면서 강정마을 시민들의 저항이 폭력으로 짓밟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는 것에 분노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 증강과 안보 강화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옥식의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가짜 안보》는 우파들의 논리에 시원한 한 방을 먹여 줄 책이다.

저자는 먼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2012년 대선 주자들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를 하와이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 과정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군기지 건설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문재인·안철수의 문제점 역시 짚어낸다.

따라서 박근혜만이 아니라 누가 집권하든 제주 해군기지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미국 해상 MD 체제의 전초기지

저자는 21세기 국제 질서의 특징을 ‘쇠퇴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가열되는 패권 경쟁으로 꼽는다. 또한 양국의 전략적 갈등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결코 동떨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의 세 가지 3자 동맹



강정 주민·활동가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찰들

을 구축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을 기축으로 삼아 동·서·남쪽에서 대중국 포위·봉쇄망을 좁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을 이러한 전략을 실현할 기회로 간주한다.

이렇듯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 봉쇄를 겨냥해 갈수록 강화되면서 한미동맹과 한국의 위상·구실도 바뀌고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MD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MD 참여를 부인하면서도 이미 미국과 합동 해상 MD 훈련·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저자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해상 MD 체제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럴 경우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저자는 우파들을 반박할 때, ‘안보 대 안보’ 논리로 접근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지나치게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진짜 안보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저자는 제주도 화순항을 해군 기항지로 겸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화순항은 당초 제주 해군기지의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에 해군기지 건설을 무산시킨 곳이다.

무엇보다 자국의 군사적 ‘안보’를 지향하는 관점은 중미 간 제국주의적 갈등과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불안정과 위험을 근본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는 저자의 표현처럼 ‘해양 안보 불안을 해소해 주는 ‘소화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에 빠트리는 ‘인화물질’”이다.

따라서 민족과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중미 간 제국주의적 대결이 낳는 모든 불안정에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는 물론 자국과 타국 노동자 계급을 겨냥한 모든 살인 무기 강화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이 책에서 정부와 해군기지 찬성파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가며 반박하는 부분과, 동아시아에서 미래 전쟁터의 교두보가 될 제주 해군기지의 미래를 경고하는 부분은 매우 설득력 있다. 또한 지배계급이 말하는 ‘안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위험천만한 ‘대국민 사기극’인지 쉬우면서도 빼도 못하게 폭로해 준다.

여전히 제주도에서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그 투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김승주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막아야 할 것은 좌파가 아니라 박근혜의 입이다

최근 선관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인천 주안역에서 박근혜 비판 내용을 담은 〈레프트21〉 신문 판매를 방해하고, 한 판매자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탄압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대해 “유신 이야기를 하고 인혁당 사건을 얘기하며 특정 후보를 비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9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기적인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할 때, 선

관위 직원 2명이 와서 박근혜를 “비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를 부렸고, “특정 후보 사진이 박혀 있는 판넬”도 들지 말라며 신문 판매를 방해했다.

10월 8일 인천 주안역 앞에서도 선관위와 경찰관 10여 명이 와서 〈레프트21〉 판매자들이 본지의 박근혜 비판 기사를 홍보한 것이 “확성 장치를 사용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판매자들을 에워싸고 귀가를 가로막았다. 이들은 판매자들을 “현행법”으로 연행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2009년 창간 때부터 해 온 통상적인 신문 판매로 선거법으로 가로막거나 처벌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레프트21〉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기간행물로 여타 신문처럼 가판대에서 공개 판매를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사를 담은 기성 신문들은 곳곳에서 아무 문제없이 팔리는 상황에서 유독 〈레프트21〉의 판매만을 문제 삼는 선관위의 행태는 명백히 진보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선거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이다.

탄압

이명박 정부는 선거 기간마다 선거법을 악용해 진보적 주장을 가로막아 왔다. 2010년 5월에는 강남역에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발표를 비판하는 기사를 홍보하던 〈레프트21〉 판매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하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지는 등 우

파 정권 재창출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탄압은 “이명박의 레임덕과 박근혜의 딜레마가 겹쳐진(〈레프트21〉 90호 기사)” 상황과 위기감을 반영한 것일 테다.

〈레프트21〉은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알리려 노력할 것이다. 또 향후 이런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겪는 다른 단체·개인들과 함께 대응해 갈 것이며, 박근혜에 맞선 진정한 좌파적 대안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다.

‘물지마 파병’ 무더기 연말 땡처리 중단하라

국방부가 5개 해외 파병부대 중 소말리아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병 기간 연장안을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청해부대의 경우 “선박 및 선원 보호” 운운한다. 그러나 해군의 강력 대응은 해적 행위의 위험성만을 높일 뿐이다. ‘아덴만의 여명’ 같은 작전 이후 한국 선원들의 안전이 더 위협받았다.

무엇보다 파병을 통한 선박 보호라는 논리는 소말리아의 가난한 사람들이 왜 해적 행위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소말리아 앞바다는 외국의 거대한 쌍끌이 선박들이 매년 3억 달러의 해상 생물들을 씹아먹어 가는 곳이다. 유럽의 강대국이 각종 폐기물들을 소말리아 해안에 버린 탓에 2005년 한 해에만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소말리아 앞바다는 세계 석



정부는 ‘평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파병은 총칼로 평화와 정의를 위협할 뿐이다.

유 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통로다. 미국은 이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미국은 소말리아 이슬람 진영과 헤즈볼라가 연계돼 있다면서 소말리아에 2007년부터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

다. 2009년부터 4년째 주둔하고 있는 한국 군함도 이런 제국주의적 개입의 일부일 뿐이다.

7년째 주둔 중인 레바논의 유엔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어떤가.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의 근거인 유엔결의안 1701호는 레바논 내에서 광범한 지지를 받는 정당인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한다. 동명부대가 배치된 티르 지역은 헤즈볼라의 무장력이 집중돼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달 동안 1백여 차례나 휴전협정을 위반할 정도로 군사침략에 준하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은 어떤 제재 조치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의 주둔 연장은 아랍 혁명에 대한 열강들의 대응과 연결돼 있다. 시리아의 내전 상황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리아와 레바논 접경지대에 병력이 집중된 레바논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UAE 파병 부대 연장도 중동 평화를 해치는 마찬가지다. 친미국가인 UAE는 이런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 관련 기술을

습득하려고 이명박에 SOS를 청했고 이에 정부는 즉각 응했다. 더군다나 UAE 아크부대는 친미국가의 왕정을 보호하기 위한 무장력을 훈련시키는 구실도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바레인에서 민주화 시위가 확산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바레인 왕정 보호를 위해 사우디군 1천 명, UAE 경찰 5백 명을 파병했는데, 이 경찰 훈련을 바로 아크부대가 해 왔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가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아니다. 점령군의 식민지 맞춤형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건팀 경계를 위해 국방부는 일부 병력을 남겨 두려 한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도 또다시 이런 ‘물지마 파병’ 연말 ‘땡처리’에 손을 들어 준다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 ‘정의’가 사기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김어진 반전평화연대(준) 간사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0월 31일(수)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공무원노조

총회 성공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건설하자

올 한 해, 공무원노조는 10월 20일 총회 투쟁을 성사하려고 전국 곳곳을 누볐다. 현장 조합원들은 임금 인상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빼앗긴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노조 계획을 지지했다. 순회단이 가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박수 소리가 들렸고, 조합원들은 함께 팔뚝질 하며 “가자! 잡실로!”를 외쳤다.

사실 그동안 현장의 불만은 커져 이 쌓여 왔다. 최근 7년 생활물가는 25.5퍼센트 올랐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40.2퍼센트나 올랐는데, 공무원 임금은 수당을 모두 합해 겨우 13.4퍼센트 올랐다. 정부와 언론은 경제가 어렵다며 공무원에게 ‘허리띠를 조여라’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넥타이’까지 조여 왔다.

이런 고통전가 속에서 정부는 노조를 계속 탄압했다. 노무현 정부는 ‘법 내’로 안 들어온다고, 이명박 정부는 ‘법 내’로 안 받아 주겠다고 탄압했다. 그래서 3천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여전히 1백36명이 해직자다.

한편 이명박의 레임덕은 노조가 활력을 되찾게 했다. 요컨대 이번 총회



6월 16일 1020 총회 투쟁 승리를 위한 공무원 노조 결의대회

투쟁의 성공은 이명박의 레임덕 상황에서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현장 간부들의 헌신적 활동을 매개로 조직된 결과다.

총회 투쟁에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이미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2.8퍼센트만 올리겠다고 했다. 총회만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만만찮은 일이다. 현장 지부에서 좀 더 단단하게 싸워, 수당 인상 등을 통해 실

질임금 삭감을 막아야 한다.

위기가 더 심해지면 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최근 수원시청에서 ‘공무원 퇴출제’ 대상이 된 공무원이 자살했다. 저들은 ‘무능한 공무원’이란 딱지를 붙여 공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면 대상이 확대될 것이므로 퇴출제 자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올 초 인천시가 추진하다 노조 반발로 거의 무산된 수당 삭감 시도도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전국적 현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여의도 농성 투쟁도 해직자에게만 맡겨 뒀선 안 된다.

당장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해 싸우되 휩쓸리지는 말아야 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모든 정부는 세 번이나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계획’이란 걸 추진했지만, 우리 임금은 여전히 전혀 ‘현실화’되지 않았다. 정부가 내봉을 개선책을 기다리기보다 총회 투쟁을 성사시킨 힘을 더욱 키워 기층에서 조직과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박천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처장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들의 당당한 첫걸음



사진 출처: 서울시립대 교직원집약위원회 <대학문화>

10월 12일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조합 출범식

10월 12일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고려대·경희대·덕성여대·동덕여대·홍익대·한예종 등 다른 대학 분회 조합원과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가해 성대하고 활기차게 진행됐다.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들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정해진 출근 시각보다 한 시간 반이나 일찍 출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휴게실은 대부분 좁고 관리실과 이어져 있거나, 남녀가 같이 쓰는 곳도 허다하다. 어떤 건물은 아예 휴게실조차 없다.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관리자의 해고 위협에 시달려 왔다. 이 때문에 관리자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어도, 불만이 생겨도, 참고 묵묵하게 일해 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서경지부와 서울시립대 교지 <대학문화> 편집위원회 학생들이 실태조사에 나섰을 때, 초기에 일부 노동자들은 조사에 응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

9월 14일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초동 모임이 진행된 후, 아니나 다를까 학교와 용역업체 관리자는 모임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한 노동자는 협박에 괴로워한 나머지 사직서를 쓰려고 마음먹기까지 했다.

이에 서경지부와 <대학문화>는 총무과를 향의 방문해, 학교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을 막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노동조합 건설을 무력화하려던 시도를 통쾌하게 꺾은 것이다.

계속된 승리의 경험 덕분인지, 출범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각 대학의 분회장들은 연대 발언에서, 자신들의 투쟁 경험을 전하며 서울시립대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웠다. 정말이지 새로운 동지들이 생긴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마음을 물론 느낄 수 있었다.

윤세현 서울시립대분회장은 “지금 생각하면 무엇이 그리 겁이 났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연대에 화답했다.

이런 연대는 더욱 확산돼야 한다. 특히,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광범한 지지와 연대가 중요할 것이다.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노동조합 출범 축하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은 고무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야 할 것이다.

유령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을 건설한 서울시립대 청소 노동자들의 당당한 발걸음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오동환 서울시립대 학생

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1퍼센트의 이익을 지지하라는 강요

나는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진보적 주장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내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오히려 벌금이 너무 적다며 재판을 청구했다. 검사는 1백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남부법원(형사 11단독 황보승형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는 집시법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회 주변 시위 금지 조항은 과잉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한미FTA로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부당하고 생각합니다”라며 한미FTA 반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대학원까지 입학했다는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편협해지고 옹졸해질 수 있느냐?”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내 정치적 견해를 묻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경찰의 탄압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다.

나는 굴하지 않고, “한미FTA로 인해 고액 등록금과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는

내 이웃들이 더욱 고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집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고 반박했다.

그러자 판사는 “벌금 깎을 생각이 없어졌다”며 “검사의 구형대로 하라”고 말했다.

내가 이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패심죄를 적용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집회 참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불리해진다’고 나를 타박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분명히 대응한 것은 필요한 일이었다.

결국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으로 판결이 났다. 벌금을 깎거나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지만, 벌금을 더 올려 달라는 검사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FTA로 이득을 볼 1퍼센트는 내 신념이 꺾이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참가하면서 내 활동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나는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김재원 노동자연대대함계 회원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학생

고려대

교수들이 불지핀 비민주적 재단을 향한 분노

지난 10월 16일, 고려대학교의 교수 1백40여 명(10월 17일 현재 1백46명)이 ‘고대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교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문과대, 사범대, 공대, 의대, 이과대 등을 비롯한 여러 단과대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교수 1백40여 명은 성명서에서 인촌가문의 이사장직 세습을 비판하고, 고려대 의료원 납품업체를 비롯한 수익사업업체와 이사장의 친인척과의 관련 여부를 밝히라고 법인에게 요구했다. 또 총장에게 총장 선출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한 행태를 반성하고, 총장의 공약 실현상태와 모금액 내역을 공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은 현 상황을 고려대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법인과 총장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단을 비판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사실 법인과 학교 당국은 학생, 교수, 강사, 직원 할 것 없이 학내 구성원의 요구와 의견을 언제나 무시해 왔다. 고려대의 모든 구성원이 분노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재단이 펀드투자자로 약 2백50억 원을 날린 사실이 올해 초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한 적이 있다. 반면 등록금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7퍼센트 올랐다(물가 인상은 40퍼센트).

학생들이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면학 장학금 40억 원 확충 약속을 받아냈지만, 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은 이처럼 수많은 기금을 쌓아 놓고 불투명하게 재정 운영을 해 왔을 뿐 아니라, 학교법인을 마치 한 가문의 상속재산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이나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과 같은 과제들을 외면해 왔다.

현재 노동자연대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계’) 고려대 모임은 교수 성명서를 지지하는 입장을 학내 곳곳에 부착하고 학생회·동아리·진보 단체 등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법인과 학교 당국에 대한 기층의 분노를 모아갈 것이다.

정다운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고려대 모임

반값등록금 투쟁 참가자 강제 연행

“1년도 지난 일을 문제 삼는 의도가 뻔하다”

10월 10일 수요일 밤 11시 경찰이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어떤 사유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경찰서에 가서야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임기 말까지 나 같은 학생을 연행하는 이명박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이지 분노스럽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지난해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서울시립대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게 만들었다. 심지어 새누리당까지 위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을 하게 만들 정도로 운동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고

성과를 남겼다.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자신이 한 공약을 지킬 생각을 하긴커녕 마구잡이 불법 체증으로 대학생 2백24명에게 소환장을 납발하기까지 했다.

경색

나도 소환장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었다. 나는 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단체들과 함께 2011년 7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불법 체증과 소환장 납발에 항의하며 단체로 출두 거부를 선언했다. 지지 여론이 뜨거웠고,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자 검찰과 경찰도 더는 탄압을 진행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경찰이 반값등록금 집회가 벌

어진 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한 목적은 무엇인가? 심지어 체포 영장은 지난해 11월에 발부된 것이었다.

최근 박근혜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세론이 꺾이는 등 우파의 위기가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진보적인 청년·학생을 위축시키려고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한 한대련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불심검문 부활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과 같은 경찰력 강화와 사회적 분위기 경색 시도와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경찰은 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위촉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부당한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도 경찰의 탄압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다.

김무석 건국대 학생

독자토론광장

Letter@left21.com

10월 31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학생의 가슴에 붉은 줄을 긋게 만드는 무정한 체제에 분노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는 언제나 표정이 어두워서 걱정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업 시간에 책을 보는 일도 없이 거의 항상 책상에 앉아 화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맘에도 그게 기뻐서 수업이 끝나고 필기한 걸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잠깐 그런 것이 아닐까 염려했는데 꽤 오랫동안 꾸준히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시험 기간이라 그 녀석만의 시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녀석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끝까지 풀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했습니다. 이 녀석이 제 과목을 공부하는 모습을 넘어서 무언가 자신의 삶에 의욕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르치는 과목 시험을 채점하면서 이 녀석의 답지를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서술형 답란을 채점할 때는 꼭 그런 답지가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은 정말 정답으로 인정해 주고 싶는데 그러기엔 어려운 오답. 예를 들어서 '아래 시의 주제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한 단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무시하고 '정답 아니면 오답'만을 강요하는 무정한 교육

어를 쓰라' 하고 물었고 답은 '장미'인데, '시에서 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름다움이 핵심이 아닐까요?' 이런 식의 답이죠. 이런 답은 분명히 정답의 조건은 채우지 못했지만, 학생이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칼자국

이 학생이 바로 그런 답을 썼습니다. 저는 이걸 맞게 할지 틀리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시험 체제가 강요하는 '정답 아니면 오답'이란 무게에 눌려서 학생의 발전 가능성에 칼자국을 내듯 붉은 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슬퍼하면서,

저는 이 체제의 교사를 하기엔 너무 예민한 것인지, 학생들의 점수보다 그 발전 가능성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과자라도 들고 이 학생을 따로 만날 생각입니다. 그러곤 요즘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습이 기뻐하고, 차마 너의 노력을 담은 답에 무정하게 붉은 줄을 긋기는 싫었다고 다독여 주기라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발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무시해 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무정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시금 저를 다잡아 봅니다.

박태현 고등학교 교사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못한다

자본주의와 동시대에 발전을 거듭한 민주주의는 언뜻 보면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둘은 전혀 궁합이 맞지 않다.

첫째, 실질적 권력 관계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하에서 실질적인 권력은 노동계급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있다. 생산수단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에 종속돼 있으므로 그들에게 실질적 통제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수의 정치', 즉 민중에게 권력이 존재하며, 민중에 의한 사회 통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몇 년에 한 번 주어지는 투표권을 가리켜 '민주주의'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형식적' 투표로서 대표자를 선출해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해도, 그러한 '선출된' 대표자를 쥐고 흔드는 것은 '자본'이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이라크 전쟁을 도발한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선출해 준 민중의 뜻을 따랐는가?

고질적

둘째, 자본주의라는 것은 계급 분화를 즐긴다. '부익부 빈익빈'은 그러한 자본주의의 속성을 일면적으로 보여 줄 뿐이다. 신자유주의는 단지 자본주의가 가지는 계급분화적 특성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1퍼센트 대 99퍼센트'라는 구호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기회의 평등'을 외치며 빈곤층의 빈곤을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생존에 허덕이는 노동계급에게 기회는 종종 박탈된다. 아니, '박탈당한다.' 개인의 생존권을 가진 자들에게 담보한 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공허한 외

침이며, '1퍼센트 대 99퍼센트' 구호의 배경에는 그런 공허한 외침을 반복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하는 자본에 대한 분노가 있다. 그러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고, 불평등의 본질은 계급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계급적'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원칙적으로 계급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가든, 노동자든 똑같이 1인 1표다. 그러나 같은 한 표라 하더라도 그 둘이 가지는 가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노동조합과 자본의 대결을 보라! 노동조합의 노동자나, 자본가나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는 그 둘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지만 현실적 힘은 누구에게 존재하는가? 실질적 권력, 마르크스의 언어를 빌리자면 '생산수단'이 자본가계급에게 독점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에서 계급분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계급대립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계급적 대립을 망각한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어려운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당장 가까운 이웃을 살펴봐도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임이 증명될 것이다. 중국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가?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발전한 한국에서 유신독재는 왜 발생했는가?

자본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만을 가지고 어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 민중을 기만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벗어나, 진정한 민중의 사회 통제는 자본주의를 벗어날 때에만 가능하다.

최태준

꽤매도 아물지 않는 것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들이다.

유해 환경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별경계 총혈된 눈으로 호흡곤란과 피부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답답한 소리인 줄 알지만 "이렇게 죽어 가려고 한국에 온 거냐"며 화를 내게 된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문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보여 준다"는 작고한 영국의 사회주의자 토니 클리프의 말은



청진기와 설압자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다.

자그만 개인 병원에서 조치할 수 없을 만큼 다쳐서 오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마르크스가 말한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란 것이 이런 것일까? 오히려 안쓰러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태연하다. 자포자기한듯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호한 미소를 띄우며 그냥 꽤매

달란다. 그들이라고 왜 아프지 않겠는가? 그들이라고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 어찌 눈물짓지 않겠는가? 여기서 안 꽤매 주면 돈 없어서 큰 병원 못가니까 제발 다시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어떻게 해 달라는 그 말을 삼키고 내게 짓는 그 모호한 미소, 그 미소에 난 결국 응답할 수밖에 없다.

중간관리자나 사장과 함께 오는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야, 압둘라야, 괜찮지? 그래 괜찮아. 선생님, 애 그냥 일하다 좀 다친 거 같은데 어차피 빠는 안 다친 거 같으니까 대중 꽤매 주세요." 자기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그거 보다는 안타까워할 것 같다. "당신은 나가 있어요!" 고향을 지르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한숨을 쉬며 호흡을 맞추게 된다. 소외, 착취, 계급 적대는 보이지 않는 먼 개념이 아니라 이처럼 아프도록 구체적인 현실이다.

최규진

벌점제가 체벌의 대안인가

우리 학교는 체벌 금지 이후에 생활점(상벌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 생활지도부 소속 한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은 아이를 꾸중하며 벌점을 주고 있었다. 그러곤 나에게 왜 벌점을 주지 않는 거냐고 말했다. 교무실에선 '벌점을 1점도 주지 않은 교사가 있다'는 말을 하며 흥을 봤다고 한다. 교사도 경찰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함정 단속을 하듯이 학생 벌점 주기 실적 경쟁을 해야 할까?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규칙이어야 한다. 그래서 규칙을 위반하면, 스스로에게 가장 부끄럽고, 주변 친구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내면화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감시자 구실을 하게 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동의 적이 되고

규칙 위반은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변질되며, 처벌을 받는 학생은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벌점제도는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점수로 환산함으로써 교육 내용을 은폐하는 경향이 있다. 실내화를 신지 않았다면 어쩌다 그런 것인지(잊었는지, 분실했는지, 세탁했는지, 거부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토론할 일임에도, 벌점 1점으로 정리되면 생활지도의 본질은 희미해진다. 더구나 친구에게 욕설하고 괴롭히기(벌점 3점)가 방과 후 청소(상점 1점) 3회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상벌점제도는 왜곡된 도덕관념 형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

상벌점제도는 체벌의 대안이 아니다. 인권을 생각하는 상호 존중, 민주적 토론과 실천이 대안이다.

김성보 중학교 교사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노동자연대다함께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노동자연대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서부지구
유신 쿠데타 40년 —
경제 성장을 위해 유신체제는 불가피했는가
연사 : 한규환(경성대학교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 전공)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하교육장 (홍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직진, SC제일은행 오른쪽 골목)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7725-9823

서울 중북부지구
위기의 자본주의 —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연사 : 최일봉(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러시아 혁명과 레닌의 사상)(책갈피)의 저자이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의 역자)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한성대 에듀센터 804호(해와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9820-5698

서울 남부지구
박정희의 유신 선포 40년 —
1퍼센트의 꿈을 위한 반동 쿠데타와 저항
연사 : 김문성(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모토(강남역 12번 출구 다이소건물 8층)
참가비 : 4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9401-1370

경기지회
동아시아는 어디로? — 독도, 다오위다오, 난사군도 ...
영토 분쟁과 패권 경쟁
연사 : 김영익(레프트21) 기자
일시 : 10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회의실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도보 10분, 대신동주인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2천 원(학생 1천 원)
문의 : 010-8700-4647

서울 동부지구
박정희의 유신 선포 40년 —
1퍼센트의 꿈을 위한 반동 쿠데타와 저항
연사 : 한규환(경성대학교대학원 정치경제학과 역사 전공)
일시 : 11월 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건대입구역 6번 출구) 3층 3강의실
참가비 :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 010-9453-5318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부산
2012 대선과 좌파의 과제
연사 : 김인식(노동자연대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 10월 30일(월) 오후 6시
장소 : 부산대학교 사회관 305호
참가비 : 2천 원
문의 : 010-5331-1968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

정몽구는 당장 사내하청 정규직화 답을 내나라



사진 제공 현대차노동조합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 당사자인 최병승 동지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10월 17일 밤에 울산 3공장 인근 송전철탑에 올랐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이 동지들은 송전탑 위 15미터와 20미터 지점에 밧줄로 몸을 묶고 나무판자 하나에 의지해 찬바람을 맞으며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다. 이 아찔한 상황에서 “결코 내 발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농성자들과 함께 파업을 시작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백여 명과 현대차 정규직 활동가들 일부가 농성 초기부터 송전탑 아래를 지키고 있다.

악랄한 사측 관리자들은 18일 새벽에 두 동지를 끌어내리려고, 철탑에 용역을 올려 보내고는 “최병승을 떨어뜨려라”고 지시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무엇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몽구 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10년 가까이 철저히 무시해 왔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불인정, 기만적인 3천명 신규채용안 제시, 불법파견 은폐, 납치와 폭행,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질러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차 부회장 김억조는 “불법파견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 3천명 신규채용안을 내놓았다”며 여전히 핏수로 일관했다.

이 3천명은 그동안의 근속연수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머지 1만명은 정규직화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안이다. 무엇보다 사측의 안은 불법파견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불법파견 공정에 기간제 직고용을 투입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에 여념이 없다. 비정규직지회 조합비 통장도 가압류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호황으로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피땀 속에서 이룩한 성과다. 비정규직 8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순이익의 6퍼센트)도 못 댄다는 것은 사기일 뿐이다.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1만3천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데는 순이익의 9.6퍼센트만 있으면 된다. 따라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와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철탑 농성 아래에서 세 지회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에는 세 지회 공동 전면 파업을 하고 울산공장 철탑 앞으로 집결할 계획이다.

연대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이 쟁점인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반갑게도,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8일 저녁부터 촛불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촛불집회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매일 저녁 6시에 철탑 아래에서 개최된다. 26일에는 비정규직지회와 연대단체들이 함께 “울산공장 2차 포위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이런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특히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지회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충분히 힘을 쏟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음을 아프게 여겨야 한다.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것을 정규직이 외면한다면, 노동자 분열 속에 민주노조가 약화되고 결국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도 공격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주장해 온 전투적 활동가 엄길정 동지가 이번에 울산 1공장 대의원 대표로 뽑힌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규직지부는 우선 사측이 최병승·천의봉 동지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와 용역을 쫓아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규직지부가 농성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함께 농성에 돌입한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연대 집회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동도 적극 조직해야 한다.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대체인력 저지 방침을 정했는데, 현재 사측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비정규직 파업 빈자리를 돌리고 있다. 대체 인력을 완전 저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대열을 늘리며 사측에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의 통장을 가압류한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금을 호소하고 정규직지부의 조합비를 투쟁 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활동가들은 지부 지도부에게 이러한 연대를 촉구하면서 실제 작업장에서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승훈 노동자연대함께 울산지회 활동가

철탑 위 최병승 동지의 목소리

“불법파견 판정 이후 10년 동안 현대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명의 동지가 스스로 온몸에 시너

를 붓고 불을 댕겼습니다. 20여 명의 동지들이 구속을 당했고 수많은 동지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2005년 9월 4일 류기혁 열사가 비정규직의 울분을 안고 돌아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철탑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철탑에 올랐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는 죽이지 마라!

모든 무급휴직자·해고자 즉각 복직시켜라

“곡기를 끊어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는 살고 싶습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0월 10일 ‘해고자 복직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23번째 비극적 죽음이 발생하면서 절박함을 더했다.

단식 농성에 앞서 열린 쌍용차 비상시국회의에는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 학생,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해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보였다.

이렇듯 높아지는 사회·정치적 압력 때문에, 최근 마힌드라와 쌍용차 사측은 쥐꼬리만 한 무급차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했다. 그러나 이조차 ‘2014년 12월까지’ ‘생산물량이 늘어날 때’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 더구나 사측은 해고자 복직이라는 정당한 요구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대중적 항의를 조직할 필요는 여전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무급차·해고자 복직이라는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민주당 친화적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해 온 김기원 교수는 마힌드라가 내놓은 누더기안에서 “희망”을 찾으라며 김을 빼고 있다.

그는 거듭 “상하이차는 적자를 벗어날 자신이 없어 한국을 떠난 것”이라며,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먹튀’ 행각까지 변호했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회계조작 사실은 정부 기관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3천여 명을 내쫓고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사측의 만행은 아만적 범죄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대체 김기원 교수

가 누구를 비호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살인하고 책임자들이 청문회에서 “호통” 한 번 당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대목에선 기가 막힌다.

청문회

청문회에 앉아서도 뻔뻔하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한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었는가.

김기원 교수가 이렇게까지 나간 데에는, ‘경제 위기’ 속에 이윤이 줄어드는 기업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뿌리 깊은 신념이 자리잡고 있다. 경영 위기 상황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 왜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기업주들은 경영 악화 속에서도 결코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 상하이차는 회

사가 어렵다면서도 결국 투자액을 능가하는 이익을 먹고 튀었다. 기막히게도 정부는 상하이차의 일부 지분까지 보장해, 우리의 세금 수백억 원을 챙겨 줬다. 그리고 당시 경영 책임자들은 여전히 쌍용차 고위직에 앉아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하고 절망 속에서 생목숨까지 잃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 비정한 사회가 정상이란 말인가?

쌍용차 정리해고는 결코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정부가 나서 일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다. 2009년 법정부리 당시 쌍용차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정부였다. 정부가 매각을 위한 ‘한시적 공기업화’를 넘어 쌍용차를 영구적으로 공기업화했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면, 지금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선 결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오히려 유럽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축 등 긴축에 맞서 파업하는 것처럼, 지난해 희망버스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며 연대투쟁을 확대했던 것처럼,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부여받고 투쟁을 확대할 때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유병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 문화제 11월 3일(토) 오후 4시 서울역 광장(서울시청광장으로 행진)